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인쇄/1999년 6월 19일

발행/1999년 6월 22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최의철

편집인/국제관계연구소

등록/제2-2361호(97. 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통일연구원, 1999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71-0

7,000원

약술회의 총서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통일연구원 창립8주년 기념
제8차 국제학술회의

통일연구원

○본 자료는 1999년 4월 8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창립8주년 기념 제8차 국제학술회의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차례 -

축 사 강인덕(통일부장관)
개 회 사 양영식(통일연구원장)

I. 제1회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통일환경 조성」

1. 한반도 냉전구조에 관한 제언: 해체될 것인가 1
Richard W. Chadwick(미국 하와이대학교 교수)
2.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34
김일평(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 ◆ 토 론 59

II. 제2회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북한 호응 전망」

1. 북한의 개혁·개방 방안 76
陸忠偉(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99
서재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토 론 137

회의일정

축 사

학술회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이처럼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오신 외빈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한반도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때,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후반, 세계를 동서로 갈라 서로 대립케 했던 냉전적 국제질서가 무너진 것도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이 실현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성숙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의 보편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은 비록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결과 반목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모든 지역과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과 나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난 시절 억눌려 왔던 많은 갈등과 모순들이 분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평화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소보 사태에서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또한 인접지역과 전 세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과거 역사가 남긴 모순과 냉

전의 잔재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냉전질서의 붕괴는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회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상황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대결과 반목을 강요했던 외적 요인은 사라졌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립과 체제 불안이 심화되고, 이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지속된다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는 인류공동체의 실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발전적인 해체문제는 평화와 번영이 약속되는 21세기를 열어 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축, 즉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체제'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이 정상적인 대외관계를 회복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냉전적 국제질서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냉전구조와 관련된 국가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냉전적 국제질서속에서 강화되어 온 북한의 경직된 체제와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체제와 대결적인 자세를 고집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처럼 폐쇄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북한에게 변화의 동기를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모든 당사자들이 관련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타결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사안 또는 한 분야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타협과 대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접근방법은 한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유관국가들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이를 위한 포괄적 접근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지

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상호의존의 폭을 넓혀 갈 때 적극적 의미의 평화, 진정한 평화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소모적인 대결과 반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역내 모든 국가들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번영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틀'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내 모든 국가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제학술회의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2천년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에게 영예로운 기회를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4. 8

통일부장관 康仁德

개 회 사

존경하는 강인덕 통일부 장관님. 소중한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술회의의 사회를 맡아주실 최상룡 교수님과 문정인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 주실 Richard Chadwick 교수님, 김일평 교수님, 류종웨이(陸忠偉) 부소장님과 저희 연구원의 서재진 박사님.

토론에 참가해 주실 박종화 대통령 통일고문님, 이경숙 총장님, 길영환 교수님, 그리고 Kenneth Quinones 대표님과 야마모토 타다미찌 공사님, Alexander Vorontsov 선임연구위원님과 윤영관 교수님, 저희 연구원의 배정호 박사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전략」을 주제로 1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KiNU 창립8주년을 맞이하여 같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1차 학술회의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최된 국내 최초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다룬 심포지움이었습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는 미·북간 금창리 협상이 일단 타결되고 때마침 북·미간에 새로운 미사일협상이 재개된 시점에서 열림으로써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국내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진단을 비롯하여, 정책적 고려사항 및 단계별 전략방향 제시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총론적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가운데에는 특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김대통령의 포괄적·단계적 일괄타결접근 발상은 임기응변적이거나 대중요법적 대안제시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재발요인을 뿌리뽑는 근본적 구상으로서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 있어서는 긴밀한 국제공조체제가 필수적이며, 또 북한의 거부반응시의 위기관리대책도 빈틈없이 용이주도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냉전적 사고와 제도·관행을 청산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의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관련 4대국의 석학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북한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인가,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반도의 냉전축쇄를 풀기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북한의 호응 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등의 문제들에 관하여 국제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그리고 방청석의 전문가들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인덕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4. 8

통일연구원장 梁榮植

제 1 회의

- 주 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통일환경 조성」
- 발 제: “한반도 냉전구조에 관한 제언: 해체될 것인가?”
Richard W. Chadwick(미국 하와이대학교 교수)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김일평(미국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 사 회: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자: 길영환(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교수)
배정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관(서울대학교 교수)
Alexander V. Vorontsov(러시아과학원 선임연구원)

Notes on The Cold War Structure in Korea:
Can It Be Dissolved?

Richard W. Chadwick
(University of Hawaii)

Preface

Although I have done research on and taught the subject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about thirty years, I have not

specialized in the strategy of military security or the tactics of negotiation. My perspective is historical and theoretical,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tical psychology of decision making, and even within that arena it has usually been with an eye to modeling in a technical sense. Nevertheless I have been asked to "think of dissolving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 shall.

Another caveat: most Koreans who have completed their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have had foremost on their mind the question of how to reunify Korea. There is hardly a thing I can say that would shed new light on this subject; yet the volumes that continue to be written make it clear that changing circumstances and fresh visions leave room still for more observations, interpretations and suggestions. I do hope that in some small way what ideas that have come my way in the course of writing this essay will be of use in the mix.

Introduction: What is the Issue?

For Korean leaders to think about dissolving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mplies two things: one that there is something to dissolve, two that whatever there is to dissolve, that portion of it that pertains to Korea is in the hands of Koreans. I am not content to make assumptions lightly. Each of these is worthy of reflection in its own right.

Regarding the focus of what is to be thought about dissolving, clearly for Koreans it is their long standing bifurcation by Russia and the USA, and I should add China; for without the Chinese intervention across the Yalu River, Korea would in all likelihood not have remained divided. And if you trace back just a little further, you could envision Korea not having been a focal point of the major power "end game" at all if it had not been for Japan. But notice; even as we begin thinking of dissolving this Cold War residue, we encounter not the will of Koreans but of Americans, Chinese and Russians, and Japanese. Thus the question arises: do Koreans have it within their power even to take a first step towards unification? And is that all there is to do? How, after all, are the interests of each of the regional and major powers satisfied, or at least attracted, to Korea such that a situation that everyone says is unstable has lasted longer than most third world countries have existed? And if these interests are now, in the light of world changes, being reassessed by them (i.e., China, Russia, the USA and Japan), is there any way to help them see that a unified Korea is in their interest? But then there is the harder, more delicate, question: is a unified Korea in the ROK's interest today? the DPRK's?

These questions are not asked lightly or with particular answers in mind. They are asked in the spirit of *realpolitik*, to be sure; but they are also asked to assist clear thinking about a very difficult and emotionally compelling subject.

It is important to put the present situ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see options and evaluate them in the light of past experiences. The past cannot be used to predict the future reliably, but our understanding nevertheless improves in the effort to do so. I will therefore first approach these subjects with an historical perspective and suggest some scenarios along the way, thinking as I go along the way, but not reaching a conclusion. At the end, I will then try to synthesize the experience and suggest some conclusions.

An Historical Review of the Korean People and Northeast Asian Rivalr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 took place as a direct result of Russian-USA rivalry at a time when each of their leadership groups had visions for China, Japan, and Korea—visions that have proven over the last fifty years to be unrealistic. Since then, the last of the great colonial empires, Russia's USSR, has gone the way of the other Europeans', following a similar pattern of decades of economic turmoil, costly military and diplomatic intimidation, and for the people a loss of any vision that could offer convincing hope for their future. Today, Russia is trying to rectify relations with Japan regarding the Northern Territories /southern Kurils, and has normalized its relations with China by settling their most important border problems and even resumed trade in military technology. The USA, from a very different set

of motives and world view, has gone far in mending wounds in its relations with Japan over Okinawa, with the Philippines over military bases, and has met China half way on Taiwan. China has opened its doors to trade and investment with the west, and to the possibility of democratization.

In contrast to these peace-promoting changes, what began as a hot war in Korea then settled into a cold war during the USA's Vietnam involvement and arms race with Russia, has now become a deadly conundrum. For Korean people the fire of hope presently burns steadily but dimly.

The Basis for Russian and American Policy Changes towards Northeast Asia

Both the Russian and American policy changes in Northeast Asia have come as a direct consequence of changes in their more appreciative views of China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a realistic appreciation of changes in their own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relative to each other and their glob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hanges have not come because of the weakening of the nation-state system as some theorists would have it; nor has it been because of outraged public opinion, nor the power of minorities to persuade by logic or by terrorist intimidation, nor because of the Internet revolution i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nor because of regional or global

environmental catastrophes or resource scarcities. Rather, these changes have come because of a growing realization that 21st century China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a military and economic giant to which Russia will be vulnerable, and to which the western world must of necessity accomodate. The other factors are for the most part there, too, but as yet they have no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ealpolitik of these major powers. The reason is that the other factors are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not at the core; what is at the core is the reality of nuclear weapons, which are large, plentiful, deadly, and under political control.

A Reconstructed View of China's Great Hope

The more rules and regulations, the more thieves and robbers.

Lao Tzu, *Tao Te Ching*, 57 (Feng and English tr.)

A modern deTocqueville might have said of China what deTocqueville said of Russia a century ago; but the fact is, China's rapid modernization has surprised everyone. Mao's closing the doors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all kinds except through Hong Kong and Macao, and his vision of a proud new China, proved to be what the Chinese people needed to rid themselves of a "century of humiliation" at the hands of western powers, especially the vices of opium and a corrupt bureaucracy. Mao's

revolution was incomplete, however, since he also ultimately did not respect the the "mandate of heaven" but ruled by intimidation. Deng Xiao-ping, though far from a democratic capitalist, nevertheless did not miss the lesson of the value of freedom of economic opportunity and gave much of China's economy a free market environment, a policy which continues to expand and deepen a mercantilist-cum-industrial revolution. And that very revolution also enables China today to see a path towards Taiwan modeled on Hong Kong rather than one that echoes the DPRK's policy towards the ROK. Jiang Zemin cannot miss that lesson either. He has the lessons of Russian despotic capitalism, western democratic capitalism, and Deng's success. Perhaps one day he will read Kim Dae Jung's essay (written when Kim directed his peace institute) and recall the misery Chaing Kai Shek caused by not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Lao Tzu, Meng-tzu and Minben Zhengchi, and not honoring the political vision of Sun Yat Sen; perhaps he will see in the USA not the sabre-rattling nuclear hegemon the radicals make it out to be but rather as the first, but not the best, fruit of a westernized version of the "mandate of heaven." One can hope.

Democracies and Violence

The truth is political-economic democracies have a higher threshold for using initiating violence for political ends, and the

threat of violence as an arm of ordinary diplomacy. Thus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PD) is severely constrained. And the truth is that dictatorships tend in time to ruin their own economic power base because they can and generally do care so little for the average person, a lesson Harold Guetzkow, my old mentor, taught so well in the 1960s using the concepts of decision latitude, political stability and validator satisfaction. Russia found this out the hard way with its own colonial empire, just as the UK did over two centuries ago in the New World with the revolution in the American colonies (a lesson it quickly forgot); the major difference was that Russia in the late 1980s was led by Gorbachev, a wise leader who saw the inevitable and helped the Russian oligarchy get out of the way without bloodshed. Most countries' are not so fortunate.

China and Japan Perspectives

Now two regional powers, China and Japan, face in Korea a situation which in some ways echoes that between the USA's and Russia two generations ago. Both have exercised suzerainty over Korea in this century, though neither thought it important except in strategic thinking vis- vis one another. Both continue to have an abiding interest in Korea for essentially the same strategic (i.e., economic strength and military security) reasons, modern war technology and shifting government ideologies notwithstanding.

I raise the following questionable scenarios to illustrat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would a unified Korea compete with the Japanese economy to Japan's detriment? Could an economically rehabilitated North Korea become a major supplier of resources to Japan, and a gateway to the Asian continent? Could North Korea see in a friendly Japan a substitute for Chinese and Russian based development? And from a Chinese perspective, would a switch to supporting reunification by some step-by-step approach, and guaranteeing the personal well-being of the top government officers, induce the west to remove itself militarily from the south, step-by-step, as unification proceeded? Or would the USA interfere as it, Russia and Japan have in the past? Could the USA be persuaded by a "Switzerland of the Pacific" vision of Korea, which would give China back much of its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Korea and still deprive Japan of its long held hope for a land base on the continent?

Korean Perspective

Now consider Korea perspectives. Neither China nor Japan historically treated the Korean people with humanitarian respect except when necessary. Since the dawn of the Christian era, the Korean people—to their great credit, when headed by governments that were strong and unified (thus no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hen governments were respected by their

people, and there were relatively good economic times—managed to repel each Chinese, Japanese, or western invasion. To conquer Korea after more than 500 years of autonomous rule under the Yi dynasty, it took the overwhelming, modernized force of a Japan whose thrust was aimed at China, and even then it requir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be internally factionalized and disloyal to the needs of the people. That sad lesson cost Korea 36 years of unmitigated slavery.

Up to the USA's conquest of Japan, the Korean people's political fate had been in the hands of a ruthless Japa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For a brief moment in its postwar history, the USA's plan for free elections seemed to offer democratic self-rule and economic self-reliance after a period of assistance; Russia and the USA were seen as liberators, not hegemons. But these two turned out to be not much different than China and Japan. Russia's aid to Kim Il-Sung enabled one of the most despotic totalitarian regimes on the face of the earth to stabilize itself and grow strong, into a state whose primary, effective way of relating to others is through arms sales, terrorism and deception. At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e DPRK, this regime was seen in Russia as an effective strategic move to counter American aspirations, give China something to think about, and contribute to Russia's general leadership of the Communist world movement. For the USA, the Rhee government was no less dependent on its support, and it looked the other way as the idea of democracy gave way to a despotic regime that like

the DPRK also had a Korean face and a Japanese temperment learned from its former masters. Thus for the early Cold War period, the north-south division of Korea was a byproduct of USA-Russian rivalry, nothing more, a rivalry that brought such grief to Korean peoples as they had not seen since the days when Silla and China teaming up against Pakche and Koguryo (and even then Silla made short work of its ally China, to unify the Korean people for the next five hundred years).

Chinese, Korean, and American Perspectives

By 1950, China was barely out of a long period of internal civil strife prolonged painfully by USA support following in the western European tradition in China. The outcome which had been thought to be predictably favorable to the USA was instead an unmitigated disaster. Mao's government, viewed as unstable and the army weak, fed western visions with possibilities of carving China up as first Europe then Japan had attempted, and even reversing Mao's revolution (recall MacArthur's dismissal of Mao's army as backward and undisciplined, and his desire to bring Chaing's forces to Korea, and to carry the war to Manchuria). But to a newly created DPRK and ROK, the issues were not who would win an upcoming China-Russia-USA war, but how to survive in the immediate present. Neither had illusions about major or regional powers' concerns for their well-being or

stability. Each sought to stabilize their own rule taking as much advantage as possible of the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they were provided. The DPRK could do this by maintaining a bellicose attitude towards the ROK, guaranteeing then-Soviet and Chinese aid, and even get the Chinese to compete with the then USSR for influence. For the ROK, maintaining a belligerent attitude guaranteed continued USA support and protection from Japan and a newly communist China.

The rise of China to regional strength and economic power, Russia's bankruptcy and loss of empire, and the prospect that the USA might, just might, come to view the ROK as it now does Taiwan vis- vis China, however, should, and I think must, give pause to the ROK, pause to reflect on traditional Chinese and Japanese rivalries over Korea. Would a 21st century China and Japan have reason to think differently, i.e., not in traditional terms of suzerainty,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China and Japan view a nominally united but factious and economically struggling New Korea in the same terms they did for the last two thousand years of recorded history? If you look carefully at China's behavior in Tibet and Vietnam, and Japan's successful insistence on the return of Okinawa and the protracted dialog with Russia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ern Kurils, do you see any change in fundamentals? And is not Korea an even more natural place for Japanese investment than China or Russia? And notwithstanding the humanitarian imperatives Clinton now so wraps USA motives in, in Kosovo, does the USA have any real

reason to hope one side or the other of such a regional struggle should win? In the end, what really matters to the USA about Korea? These questions must be raised in Korean minds on both sides of the DMZ. And out of these uncertainties some new ideas might emerge regarding the value of unification.

An Hypothetical DPRK Initiative

Let us speculate for a minute on the following scenario. The North, under declining Chinese and non-existent Russian support and sustained USA pressure, decides to risk some measure of internal stability by launching a much wider opening than the currently existing KEDO agreement, UNDP presence, some south Korean family visits, and the foreign investment zone, none of which amount to much. So it admits to and announces a cessation of all NBC research in the interest of reducing tensions, and invites south Korean inspectors and political talks in Pyonyang aimed at some form of integration analogous to the very early stage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 Rather than KEDO, the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becomes the model: it proposes that their two governments plan and construct a peninsula-wide energy and communications grid. Japan is asked to finance rice exports from India to Korea for a time in return for which it gets a verifiable promise to remove all its NBC/WPD threat to Japan. China is asked for advice on reforming agriculture

and running some province-wide experiments in free market economics. The ground troops along the DMZ are reduced in number and equipment but the USA must promise to withdraw some of its offshore military and intelligence operations in return for greater transparency through the south Korean inspectors. A student exchange program is organized, each side paying the expenses of its guests. Scheduling of these moves is settled amicably, and the north explains all this to its people as a change of heart in the USA government and a releasing of the southern government from American suzerainty, given its Balkan and Mideast problems. All parties look forward to more progress with the Tumen River Project.

Would Japan agree? Would the USA agree? Would the ROK agree? Or would they hold out with yet more demands that the DPRK could not or would not accept? Why would they? And why would the DPRK risk this?

Stable or Unstable?

Much has been said about how unstable the present situation is. Yet it's been with us since 1953. That's longer than most "third world" countries have existed as post-colonial, independent states, not as long as the Yi dynasty of course, but a respectable duration. A wise scholar has been saying for decades that

...the most important single precipitating factor in the outbreak of war is misperception.

and

When a leader on the brink of war believes that his adversary will attack him, the chances of war are fairly high. When both leaders share this perception about each other's intent, war becomes a virtual certainty.

John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All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war may be present, but it takes the human perceptions and judgments of leaders to actually take the action. It is widely recognized today that it is time for everyone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to reduce the volume of their propaganda and sit down quietly someplace and have some non-judgmental conversations about each others real needs. I mean basic needs in the Maslowian sense: survival, security, love of country, respect for each other, and our wider humanitarian purposes. Perhaps Kim Jong-il thinks Kim Dae Jung won't last or be able to "consolidate his power" as the expression has it, and vice versa. If the wider Korea leadership groups (whom Guetzkow called the validator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are wise, however, they would do well I think to support such a move towards rapprochement. Trust can only be built one moderately vulnerable step at a time. Each side needs to learn the other will not take advantage of a short term vulnerability to gain a tactical advantage at the expense of the longer term, shared vision.

Renewable Japan

Consider Japan: Under General/Governor MacArthur, Japan became a truly democratic nation; and as history has witnessed, Japan remains constitutionally opposed to the use of violence for the pursuit of national aspirations. While this has not prevented it from developing a navy and a technological potential for producing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NBC) weapons, it has not gone as far as India and Pakistan for instance, probably because of both its historically unique experience of actual nuclear holocaust and because the USA nuclear umbrella has been there when needed.

Japan's great economic prosperity also began under MacArthur when MacArthur invited W. Edwards Deming to do for Japan what he had done in defense industries during WW II. Neither lesson was lost on Japanese leaders who came to see that becoming a world leader in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consumption goods ("Japan, Inc." It was Deming to told Japanese leaders that they could not afford to compete with each other) could achieve for them goals of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at a mercantilist strategy employing armed force never could. While western colonialists continued their bloody retreat from Asia and Africa and even as the USA took over the colonial Indochina war from France, once again finding itself on the losing side, Japan simply continued to soar to prosperity.

Could this renewed and revitalized Japan go into the 21st century with a traditional interest somehow turned into a strategic concern over a strong, unified Korea under Chinese influence? Recently this concern was acknowledged by the Korean Consul General in Honolulu at the 1999 Pacific Symposium held at Camp Smith March 1-2, in an essay entitled "Over the Hurdles toward the 21st Century;" he summarily dismissed the concern on the grounds that historically Korea has been much wiser than to attack its neighbors. What then could be the cause? Certainly it could not be over one Taepo Dong missile test, or competition from Hyundai and others. Such potential threats are credible enough, but they are very low level and more than matched by their equivalent in internal rivalries within Japan itself. Witness the internal corporate rivalries in Japan, the Keidanren putting up with the Yakuza, and the LPD falling into disarray over the government-corporate 'chaebols' (conglomerates) misguided, a competitive policies which led to the present financial crisis (not so different from Japan's); and as regards the threat of violence, witness the sarin gas massacre in a Tokyo subway (and wasn't that the 9th attempt in a string of 8 prior failures?). Certainly it could not blame others for financial crises and internal terrorism ultimately of its own making (easy enough to do, however!). These threats to its security and stability are far more substantial and immediate than anything Korea—north, south, or combined—could or would offer.

If one views these situations as discrete events, one misses the

point. I think that the concern with a modernized, united Korea, if any, lies quite outside present day Japan-Korea relations (north or south). Rather, Japan is still working out its own sense of guilt for 36 years of enslaving an essentially peaceful Korean people (and for that matter, its dastardly deeds in China and Manchuria). As the Germans continue to do; as the American continue to do so with their Afro-American and native American subpopulations (including Hawaiians); as Europeans do over their treatment of Jews, as in fact most former colonial powers still do in their art and culture; in fact there is no civilization that is entirely free of guilt for inhumane treatment of foreigners and minorities. This does not affect each state's realpolitik; it does impact on realpolitik assessments, however, that is, in how anxieties promote fears which translate into estimations of intent, in evaluating the likelihood of alternative strategic scenarios. The loud cries of the oppressed and minorities we turn a deaf ear to come back to us through distortions and amplifications of our fears, and we act on our fears.

This is a universal and a significant problem. A wise scholar has accumulated a databank of 275 minorities at risk today worldwide, 275 at risk of genocide, worldwide. He has an encyclopaedic entry describing its history, e.g., Kurds in Iraq, Kurds in Turkey, etc. It's the first collection of its kind and its on the Internet for all to see (thank you Dr. Ted Gurr). Another wise scholar studying war concluded that three factors were the primary contributors to escalation to war: fear, fatigue, and

grievances or ambitions (Louis Fry Richardson). The fear component is exaggerated by guilt over others' legitimate grievances. Well, as a wise friend quipped recently, "our past is always with us." Our demons are generally those we love to hate. We certainly see the tremendous human potential for political delusions in the Balkans and the Mideast and North Africa today, delusions which nevertheless are politically useful for leaders willing to capitalize on them, and dangerous if discounted. Frustration, alienation and disempowerment can be, and usually are, for a politician what money is for a banker. You can get people to work long and hard for either (the former to reduce, the last to increase), so how they are invested and capitalized on can and does determine the course of history by how they are channeled into policy. But I digress. The point is some in Japan may fear that a united, modernized Korea could have both motivation and opportunity to do Japan harm, and have an ancient ally in China to help it, for similar reasons, depending on future circumstances.

How to defuse this scenario? Perhaps this will be seen as a quixotic chasing of windmills, but if Japan would take some further steps at reparations across a broad spectrum—not simply monetary damages to "comfort women" but a broader campaign of reconciliation involving arts, culture, academic conferences, religious conferences, as well as a steady stream of highly visible and useful goods such as computers for classrooms, perhaps programmed in Korean script and with built-in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translators on chips) and with an imprinting such as "apology computers" and laying down an optical fiber grid for the Internet use (since they did so much to suppress the Korean language and destroy communication in Korean), so that all Koreans would know that Japan has indeed come to understand what it did and why it would never do it again. This may be as difficult for Japanese politicians as for German politicians with the Jews. To our discredit, the USA never did go after Japan like it did Germany at the Nuremberg trials. We firebombed the cities of both of course; that was war. But Japan we also nuked--thus acquiring our own portion of guilt for generations to come. Apologies are due all around. It's been said recently that "time heals all wounds" and that the memories of atrocities are growing dim. Even the most cursory examination of the cultures in the Balkans and Mideast reveals something quite the opposite. The stories are handed down from parent to child forever, or until there is true confrontation and reconciliation. I don't think it is a coincidence that Christianity is taking hold strongly in Japan, Korea and China today because at it's core the message of forgiveness and "love one another" provides an emotional antidote to deep-seated, suppressed hatred. A middle aged Korean today can look in a mirror and see a Japanese and in his heart say "I hate you because my mother did," and a Japanese father can look in a mirror and know there is a son or a daughter out there that can never be and will never be known or acknowledged. A Christian can say, "I am forgiven; we all are

forgiven; because He came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it, and He did it, for everyone; all we have to do is accept the gift." This Christian message is not echoed in the deep indifference of a disengaged Buddhist creation, or in the deep but formal rituals of Confucianism. It is unique to Christianity, and it is being responded to. Is there some way that politicians on all sides can capitalize on this movement, perhaps by beginning with its followers to say "hey! follow me. I'll promote legislation to admit and atone," or some such.

I'm speculating here; perhaps some creative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could come up with a program of reconciliation that is less American and more culturally sensitive and even more useful in modern times. Perhaps the initiative could come from a joint DPRK-ROK-Japan symposium; perhaps the symposium could be composed entirely of non-governmental but wise and respected elders, or young people representing themselves as Korea's and Japan's future—children as it were, pleading for their parents to forgive and apologize so that the "weight of all the dead generations" does not "hang like a chain around the necks of the living"—I recall that quote from Lenin, I think. Anyway, I do think that as long as this issue remains in the Korean consciousness, it will also remain in the Japanese consciousness. Unless it is managed, "downsized" as it were, by sustained, sincere efforts honestly made and graciously received, it will always be a reservoir that leaders will be tempted to capitalize on, and on occasion be coerced to capitalize on if available, for their

own survival. These things last in cultural consciousness for millennia if not properly handled; again, witness the Mideast and the Balkans.

The US of A: Observations a Few Steps Removed from Strategic Perspectives

And now we come to my homeland. We began this excursion into history with two questions: what is there to dissolve? can Koreans do it? The American perspective is, well, vast. The most recently available document on the subject regarding Northwest Asia introduces USA interests thus:

Consistent with our global security strategy, U.S. engagement in Asia provides an opportunity to help shape the region's future, prevent conflict and provide the stability and access that allows us to conduct approximately \$500 billion a year in trans-Pacific trad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Asia-Pacific Region, 1998.

Source: <http://www.defenselink.mil/pubs/easr98/#Introduction>

So it is U.S. engagement policy in Asia that "allows us to conduct" half a trillion dollars in trade each year across the Pacific. The focus on responsibility can hardly be overlooked. Similarly,

Our treaty commitment and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help deter any North Korean aggression by making it unmistakably clear that the U.S. would immediately be fully engaged in any such conflict.

Ibid

I hate to sound unpartiotic but I would gently like to remind the editor of this document that a direct, sustained attack on a U.S. military vessel, the U.S.S. Liberty, by an ally, Israel, in 1967; resulted in a negligible reaction that is felt to this day as sheer outrage by quite a few American families and military personnel. There is even a website detailing this incident and its aftermath at <http://www.halcyon.com/jim/ussliberty/welcome.html>, including a report on some not inconsiderable efforts to contain if not smother its impact by both Israel and the USA. Now the point here is not to berate the USA, its government, or the military, but simply to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USA is not "immediately" and "fully" engaged when an act of aggression occurs against us. We have a constitution and a Senate that declares war. We have a President that may make decisions one at a time. These observations can hardly be lost on the DPRK. There are no automatic triggers, even in nuclear war. Were that not so, we would have been engaged in a Herman Kahnian "spasm war" many times over with the Russians because of false signals of an imminent nuclear attack. A DPRK attack on the ROK killing American servicemen and women, one would hope would be judged agains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occurred. We

have been brought to the brink of war, even nuclear war in the case of the Cuban missile crisis, chiefly through errors of judgment. Plans and commitments notwithstanding, I would hope we would pause to reason.

There has been a great deal written about commitment and the necessity of taking timely action. It has been known for some time that enemies tend to be seen as more hostile, disciplined, centralized, coordinated, responsive to actions, etc., than in fact they are (Robert Jervis, 1968: "Hypotheses on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Vol. 20, No. 3). Time is needed to evaluate. Minefields work two way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S *Turner Joy* and USS *Maddox* in the Gulf of Tonkin, and the USS *Liberty* in the Mediterranean had a lot to do not just with who was doing the firing and when, but also what leaders' intentions were at the time; least significant was the terrible damage, or lack of it, to the men and equipment involved.

This is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Koreans on both sides of the DMZ need to know that behind the armaments there are people. Perhaps Kim and Rhee in the late 1950s wouldn't have minded a hair trigger, but I suspect the two Kims in 1999 would, and for similar reasons. The USA could tur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wasteland, as it almost did large areas of Vietnam and Cambodia. Surely the lessons of the Gulf War have not gone unnoticed. The troop and tank ratios and artillery capabilities would hardly matter if, say, fuel-air explosives were used as in the Gulf War. The minefields would disappear.

The idea that a modern war could be fought that either side could claim anything but a pyrric victory I find hard to imagine. If China saw in a USA retaliation a mortal threat to its security, would it not use an IRBM, even on north Korean soil? We had plans in the mid-1950s to atomic bomb the UK and France if the USSR occupied them. It is a good thing to expect hesitancy in a preemptive first strike situation. Second, a moder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genocidal. The kill ratio in the Persian Gulf was about 100:1. The bulk of American military power in the region isn't even on the ground in the ROK. And unlike MacArthur's march to the Yalu, we know today where the DPRK troops are and where China's troops aren't. Is someone missing the obvious? Third, there is at least some official consideration given to tension reductions that are already under way. In the same essay quoted earlier, the Korean Counsel General in Honolulu wrote "Apart from unification, many Koreans believe that competi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over. Although their fear of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remains, it is reduced a little." If the threat is declining in fact and in perception, what are we talking about? Or is this merely uninformed opinion, or even propaganda intended to catch the DPRK off guard (from Honolulu)?

Now of course war could break out tomorrow and everything I've speculated about might unceremoniously be dumped into the ashbin of history. In the time I have left for your attention I'd like to say/write something even more outrageous. That is that

over the long run, contrary to Machiavelli, it is better to be loved than feared. The reason the USA is strong today is because Americans love their constitution and those who wrap themselves in it. The reason there is still aloha in Hawaii for continental USA Americans, in the Philippines, in Germany and Italy and Korea, is because our idea of conquest is rehabilitation and reform and raising our enemies back up to be our equals, not sycophants and clones, equals. No, this is not perfection. But again I go to our cultural roots, and not for a self-serving purpose, but for the same reason Kim Dae Jung searched for a democratic Korean icon, and found one in Tonghak's philosophy and leadership in the 1894 revolt against exploitation. It's been pointed out by a contemporary American historian that the American revolution was in fact the culmination of a centuries old movement for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and that the two were inseparable. The very un-European reaction to World War I in the USA was Wilson's 14 points. It took another world war and more bitter colonial revolts, a Russian nuclear arsenal and strong American economic pressure and an unwanted nuclear hegemony to convince Europeans that unifying economically and democratically was after all the best way to long term security and self-actualization (to borrow from Maslow again). Grand strategy based on assisting those motivated and educated in modernity is one thing; strate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coercion and intimidation are the only real constants, is another. America still doesn't seem to trust its own history.

Let us look for a moment at the present financial crisis, widely recognized as a regional, perhaps even global, security concern. A deep water navy, THAAD, etc., are useless to help allies see the long term difficulties of the "Asian Third Way" of what in the west would be described as sweetheart deals between governments and multinationals. Successful military strategy can assure that a government has people to take care of, but it is not a substitute for "taking care of your people;" survival in a global economy requires that each country offer the best goods and services it can generate at the lowest price consistent with staying in business and providing jobs, things the average worker wants to be able to do and will do if not robbed of his/her pride in workmanship (do I sound like W. Edwards Deming? I hope so!). There is actually nothing hard about this ethic; it's universal. It has to be beaten out of people by other people who've had it beaten out of them. From a disgruntled Lao Tze to W. Edwards Deming to a recently post-humously published book on management by Abraham Maslow, the message is the same. Does Northeast Asia need military armament and grand strategy to defend its respective nation-states. Of course; the curse is still with us. But while engaged at that level, we need to look beyond, to our real purposes and ultimate concerns. We neither need to be threatened nor need always to prepare for being threatened (contrary to the realist paradigm). We need to put on a human face, mature in trust, good will, and understanding, and take off the masks of fear and hatred.

Summing Up

A wise man wrote that ROK policy should be this:

1. South Korea will not tolerate any military provocation.
2. South Korea has no intention of unifying Korea by absorbing North Korea.
3. South Korea will promote conciliato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o this we might consider adding—may I be so bold?—this:

4. South Korea will aim to promote peace by learning how, and then teaching others how, to produce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which people want at prices they are willing to pay, so that all may survive, be secure, be respected, and grow spiritually.

Can the Cold War be dissolved? Yes. Can Korea do it? In a sense, yes, since it is already happening, just not very well guided as yet. How? Koreans, like the Pilgrims of Plymouth Rock, must find their own way. The way cannot come from a visitor. It must come from the Korean heart and soul and speak the language of the Korean heart and soul. In Germany, Berlin border guards in the end simply refused to fire (except for one who was tried and

convicted) and a friendly neighbor (Hungary), though poor and underdeveloped itself, let 10,000 refugees come across every day for months. The dislocations were terrible. Few were joyful for long. But the spirit of freedom would not be deafened, though 40 years had passed. Is there such a spirit in the Korean people? Of course; it's in everyone. Waiting. Already the south has experienced a level of development wholly unexpected. Not all have experienced this, and not easily, but on average. Even an income of \$6,500 instead of the normal \$10,000, is riches compared with \$300/year. Is this not just as possible in the north? Of course. Does this not speak to something beyond income levels, speak to a spirit of hope and drive out fear? One of Deming's 14 points, "drive out fear," sticks with me. Some governments produce and use it; others substitute a decent wage, pride in work, and a better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to do even better. Let's hope that the DPRK gets this message more loudly.

□ 국문 요약

한반도 냉전구조에 대한 제언: 해체될 것인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의 재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새로운 비전에 관한 여러 저술들을 토대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반도 문제의 쟁점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문제를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라는 해체대상이 있다는 점과 둘째, 해체대상이 있다면 해체시켜야 하며 이는 한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분단에서 기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남북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통일을 이룩할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점으로 현재 분단이라는 한반도 냉전구조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적용시켜 보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한국의 분단은 양극체제의 상징인 미국과 러시아의 라이벌 대결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한국을 바라보는 지난 50년간의 지속된 비현실적인 관점의 결과이다. 또한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러, 중·러, 미·중, 미·러 관계 등이 평화적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흐름속에서 한반도만이 냉전구조의 잔재물로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한반도 주변관계를 고찰하자면, 또한 현재에 있어서 미국·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변화는 국제환경속에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가 점점 이 지역에서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21세기에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강국이 될 가능성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날의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상처받은 현실속에서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혁명은 완결되지 못했고 등소평으로 이어졌다. 덩샤오핑은 민주주의 자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이해한 지도자였다. 덕분에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중상주의적 산업혁명(mercantilist-cum-industrial revolution)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러시아의 전제적인 자본주의의 교훈과 서구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덩샤오핑 성공의 교훈을 토대로 중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중국은 예전과 같은 강국으로의 재건을 꿈꾸는 것이다.

일본 역시도 2차대전 이후 폐허속에서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정착되면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위치에 서 있다. 또한 일본은 과거에 36년간 한반도를 강점해온 역사적인 죄과를 지니고 있기에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속에서의 한·일, 북·일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역사적 고려도 필

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일본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안에 들어간다는 공포와 위기의식은 일본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의 지역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며, 각국의 입장에서 북·일, 북·중, 북·미, 북·러와 남북한관계의 시각에서 '한국의 태평양지역에서의 스위스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의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나라였고 일본은 36년간 불법적으로 강점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의 시기에 들어서 냉전초기 양대진영을 구분되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논리에 의해 분단되었다.

또한 북한의 가설적 이니셔티브(hypothetical initiative)의 관점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 쇠퇴하고 러시아의 역할이 사라지는 가운데 미국의 압력만 가중된다면 북한은 체제내부의 안전성을 측정하게 될 기회를 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통하여 장거리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농업개선과 자유시장경제의 경험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감축되어 군사적 위협성이 줄어들다면 남한에 주둔중이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 태도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들의 수용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환태평양권이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각종 분쟁과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는 더욱 군사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거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과 긴장완화를 위한 주요한 고려사항을 본다면, ① 비무장지대 양편으로 무기들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상호간의 집단적인 대량학살극이 될 것이다. ③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몇몇 공식적인 조치는 있어야만 한다.

대북정책의 3원칙에서는 ‘무력도발 불용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남한은 평화를 증진을 목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배우고, 다른 국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지불할 가격에 원하는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듯이 모두가 공존하고, 안전하며, 존중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하는’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의 해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슴속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남북한 양쪽이 체제선전을 멈추고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생존, 안보, 애국, 상호존중,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독일통일 직전 동독의 국경경비대원은 결국 탈출하는 주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듯이, 한국인의 가슴속에서 해결의 노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조급할 필요 없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단을 경험한지 40년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남북한간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미국의 역할

김 일 평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1. 서 론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생긴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1948년을 냉전의 기원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한반도의 38도선상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분단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시작했을 때부터를 분단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자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6년과 1947년에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남북통일문제를 토론한 바 있다. 그러나 미소간의 냉전 개시로 미소공동위원회는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 회담이 결렬된 후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에는 두 개의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남북통일은 요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남북의 분단은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1950년 6월 북한은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과 유엔(UN)군의 참전으로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은 좌절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의 냉전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국제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유럽의 냉전구조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종식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탈냉전시대의 접근방법(The Post-Cold War Approach)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냉전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마음과 머리속에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 골수에 박혀 있으며, 남북한의 지도자와 지식인도 냉전의 구조 속에서 정치와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방법은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구조를 제거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본고는 국제적인 요인으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사이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전략적 협력관계'가 수립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해체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상호 이데올로기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신뢰를 회복하며, 경제교류와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동시에 민족공동체가 수립하지 않으면 냉전구조를 해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탈냉전시대의 접근방법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며 냉전 해체의 제1보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미·중관계와 한반도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1940년대의 미소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동란에 중국인민의용군이 개입하여 북한체제의 붕괴를 저지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미국은 중국을 20여 년간 승인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국제연합(UN)에 가입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10월 중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검토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으며 또 냉전구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1960년대의 중·소분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69년에 발생한 중·소간의 국경전쟁은 양국을 적대관계를 만들었고 그 결과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북방, 즉 소련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을 남방, 즉 미국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상황속에서 중국의 대미접근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키신저 안보담당 보좌관은 ‘전략적 문제해결’(the strategic breakthrough)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미·중관계의 정상화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미국내의 복잡하게 얽힌 대만문제 때문에 미·중간의 국교정상화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가 1979년 카터행정부 시대에 국교정상화를 이루게 되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경을 방문하고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중관계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라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 1989년 북경에서 발생한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로 매우 악화되었던

미·중관계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새로 정립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와 보수진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위협논리(the china threat)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내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우선 '대만 문제'의 해결이고, 둘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 문제이고, 셋째는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하고 미·일신방위지침을 저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정책과 대한반도정책이 변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할 수 있다면 대미관계는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96년 제주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의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을 받아들이고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자회담의 목적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4자회담의 목적을 성취하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해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끈질기게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대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간의 단독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 되었을 때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협상에서 남한을 제외시키고 휴전협정의 서명국인 북한, 미국, 중국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설

득과 영향력의 행사로 북한은 1991년에 국제연합에 한국정부와 동시에 가입하였고, 또 4자회담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으며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북·미 양자간의 협상을 다자간의 협상으로 전환시켜 놓은 것이다. 거의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친 후 제1차 본회담은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 1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제4차 본회담을 계속한 바 있으며, 제5차 본회담도 금년 5월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차에 걸친 본회담을 통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은 휴전협정에 서명한 북한, 미국, 중국만이 해결할 문제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협상으로 성사시켜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협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4자회담 전략은 바뀌고 있다. 1998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분과위원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태도를 바꾸어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본회담 의제의 제1순위로 설정하는 것을 양보하였다. 따라서 1999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본회담에서는 북한이 의장국으로 사회를 보았을 때 북한은 ‘긴장완화’와 ‘평화협정’의 두 개 분과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매우 의의가 있는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대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찬양

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협상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의 승계 이후 북한 내부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의 분단을 반세기 동안 지속시켜 왔으며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도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의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4자회담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회피하고는 성공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로에 서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S.-DPRK Agreed Framework)는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미기본합의서가 성공하느냐 또는 실패하느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 그것은 KEDO의 두 개 목표인 연료보급과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경수로 건설을 많은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1997년 8월에 경수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북한은 화력원자로에서 산출되는 연료봉의 봉인작업을 완료하였으며, KEDO의 작업은 북한의 기술자와 한국의 기술자가 상호협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북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경수로 건

설이 완료될 때까지 증유를 공급하는 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매년 50만 톤의 증유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의회는 2,200만 달러의 재원을 승인하고 통과 시켜야 하는 데 클린턴정부는 공화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미국의회의 보수파와 공화당 의원들은 제네바에서 1994년에 체결한 북·미기본합의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 건설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미국의회의 보수파의원들 중에는 제네바 북미합의서를 폐기시키고 북한의 핵의혹시설에 대하여 공중폭격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 북한이 지난해 8월 31일 다단계 탄도미사일 대포동을 발사하였을 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미지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공화당의원 중에는 대북정책도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

미국의 공화당의원 중에는 북한은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미국의 의회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의회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새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페리조정관은 공화당의원의 대북정책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강경보수파의 입장을 도와주고 있으며 대북 유화정책을 강경노선으로 선회시키는 데 일역을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북한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포용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잠수함을 남한에 침투시키고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 대하여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회의 보수파는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중국에 대한 클린턴정부의 포용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파는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인권문제를 강경하게 제기하면서 대만에게 최신 첨단무기를 판매하고 대만의 안보를 강화 해 주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정책을 강경노선으로 바꾸게 된다면 미국의 대북한 정책도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냉전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와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냉전구조 속에서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대북정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중간의 화해와 협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의 역할이 막대하고 미·중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이전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미·중간의 냉전구조는 대만문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중간의 적대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미·중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 북한간의 휴전협정도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동시에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대북포용정책과 냉전구조의 해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김대중대통령은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하여 북한을 포용하는 공존공영의 정책을 수립했다. 그와 같은 정책은 남북통일 3원칙을 정책기조로 발표한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위협이나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폭넓은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포용정책은 김대통령과 주변 4강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일의 이해와 협조를 획득하였다. 매우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의 문민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기조도 불투명하였고, 또 일관된 정책도 없었다. 김영삼정권은 대북정책을 북한붕괴에만 초점을 두고 급급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팔타결을 둘러싸고 한·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물고 갔다. 문민정부의 벼랑끝외교 때문에 한·미간의 견해차이가 많이 생겼다. 미국은 문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여 1994년 10월에는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를 도출해 내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켰다. 미국 내에는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기본합의서」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금창리의 핵의혹 지하건설과 지난해 8월 31일에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의 개발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포용정책은 과거의 냉전적 접근방법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 있고 그 외의 대안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우

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또 공존공영을 할 수 있다는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서 국제규범을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기조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으며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포용정책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체제의 변화 문제'이다. 북한의 체제는 과연 변할 수 있으며 포용정책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다. 북한 내부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강산관광이 허용되고 금강산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간의 물물교류도 확대되었다. 지난 1998년 9월에 채택한 북한의 신사회주의헌법은 시장경제의 도입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농촌에서는 개인의 텃밭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에도 중국식 가족책임생산제도가 도입되어 농산물 증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배우기 위해 북한이 연수생을 매년 30명씩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중국의 상하이와 홍콩 등지에 파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북한은 중국식 모델을 따라서 경제개혁을 시작했으며 나진·선봉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해서 중국식 개방정책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변화가 다만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변화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변한다면 북한의 정치발전도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 중에는 과거의 개발독재국가도 경제개발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개방정치와 민주정치를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논리와 똑같은 이론이다.

따라서 한국의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반드시 정치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중국은 20년간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발전은 아직도 요원한 희망사항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한 후 개방정치 또는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대북포용정책은 한 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대외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한국의 포용정책은 북한이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 지기를 추구하고 있다. 또 일본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냉전시대의 대북정책보다 매우 전향적인 탈냉전시대의 대북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행사하여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것은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고 관계개선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대북관계를 개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은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변하면 북한의 대남정책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북한도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냉전시대의 외교정책도 바뀌어서 탈냉전시대의 정책을 모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인 무력사용을 버리고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인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하기 위해 6·25동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큰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지속되었고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를 복구하였고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중소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에는 자주, 경제에는 자립, 국방에는 자위의 슬로건을 세우도록 강요당하였다.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에 의하면 북한은 1960년대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이탈하고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도 믿을 수 없으며 맹방과 강대국의 지배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독립노선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중·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에 북한은 대미관계의 개선을 시도한 바 있었다. 또 남북대화도 시작하여 1972년에는 「7·4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일본에서 김대중납치사건이 발생하고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배당함으로써 북한은 평화전략을 포기하고 또 다시 강경전략으로 선회하였다. 1970년대의 국제정세는 북한과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북한은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남한의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과 12·12사태로 전두환 군사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북한은 대남전략을 바꾸고 한국의 내란을 부채질했다. 1980년대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두환정권의 타도를 위한 테러를 증가시켰다. 미얀마의 아웅산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북한은 한국의 내란을 조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또다시 완화되기 시작하고 남북간의 고위급회담이 개시되었고 1991년에는 남북한의 국무총리가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불가침을 다짐하였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도 선언하였다.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발표된 20년 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또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맹방인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중국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시간문제 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설득으로 북한은 한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하였으며 대미, 대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대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맹방인 소련과 중국을 불신하게 되었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의 지도자는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은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관계개선도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논리는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북한은 멸시당할 것이며 자신의 안전보장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1950년대에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남한에 도입하였으며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1985년에 체결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는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핵확산 방지정책은 무산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게 하고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석을 만나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기를 권유하였다. 카터-김일성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은 NPT 탈퇴를 번복하였고 북·미간에는 제네바협상이 이루어졌다.

1994년 10월 21일에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시설을 봉쇄하는 대가로 미국, 일본, 한국은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하여 주기로 약속했다. 북한의 벵골곶외교(brinkmanship diplomacy)가 결국 성공한 예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 미·북 국교 정상화와 경제제재의 완화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창리에 지하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핵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금창리는 영변에서 16km 정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의 정보계통은 금창리의 지하시설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냉동풀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핵처리시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여 차례의 북·미회담 끝에 미국의 카트만 특사와 북한의 김계관 외교차관은 지난 3월 16일 합의를 이루었다. 미국은 금창리 지하시설을 1999년 5월 과 2000년 5월에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방문을 허용하고 핵개발시설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가(quid pro quo)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에 10만 톤의 감자종자를 제공하고 50만 톤의 식량을 공급하기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북한은 금창리시설 사찰은 북한의 주권침해라고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나 「제네바기본합의서」의 파기를 두려워하고 북·

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 미국의 금창리 방문을 수락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의원들은 북한에다 식량원조를 하는 것은 곧 사찰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아무리 식량을 원조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작년 말에 50만 톤의 식량을 UN 산하의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식량원조는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농민의 잉여농산물을 북한에 원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농촌을 도와 준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금창리사찰 합의는 미국내의 대북정책 비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의 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작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포용정책과 클린턴의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이 변하지 않고 북한의 대미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여론이 강경보수정책으로 선회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가 아무리 대북유화정책을 선호하여도 미국의회의 강경보수파가 계속하여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북경제원조를 반대한다면 클린턴행정부는 공화당위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클린턴정부가 공화당위원의 압력에 못이겨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북한은 다시 한 번 안보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중폭격도 불사할 것이다. 북한은 6·25동란 당시 미국의 공중폭격을 경험한 바 있다. 또다시 북한의 안보위협을 당면하기 이전에 북한은 전쟁을 피하고 미국과 협상하여 국교를 정상화하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조장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협상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북한만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금창리 지하핵개발 의혹시설에 관한 합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공화당의원들 중에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핵개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길만 위원장은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에게 서신을 보내고 북한은 지난 여름 지하의혹시설이 언론에 부상된 이후 핵시설을 다른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질질 끌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외교협상의 흥정용(bargaining chip)으로 쓸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석가도 있다.

금창리 지하의혹시설에 대한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페리 대북조정관은 북한이 북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측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북한은 과연 존망의 위협을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금세기 말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는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가? 1970년대의 미·소 데탕트와 미·중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남북협상으로서 1972년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

부터 무력통일을 대남전략으로 삼았으나 국제환경의 변화로 평화전략으로 바꾸었다.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자주적, 평화적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으로 이루겠다는 것을 7·4공동성명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전면전을 피하고 계릴라와 첩자를 남한에 파견하여 한국사회의 혼란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반란을 재촉하는 양면작전을 계속해 왔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군사독재가 등장하고 광주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북한은 남한에 첩자를 파견하여 한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혁명을 이루고자 모든 힘을 다했다. 미얀마의 아웅산사건은 북한이 한국정부의 전복을 그 목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한국에 홍수가 났을 때 북한은 식량과 구호물자를 제공했던 아량도 보였다.

그러나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으며, 소련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은 또다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한 데 응하고, 1991년에는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7·4공동성명을 발표한지 20년만에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하나의 문서로만 남아 있으며 실행에는 옮겨진 것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보수파의원들 중에는 북한이 제네바의 북미합의서에 서명하여 미국을 안심시켜 놓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네바합의서를 파기하고 대북정책은 강경노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양면전술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기만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보다는 채찍이 효과적이고 유화정책보다는 강경정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공화당의원과 보수파는 주장하고 있다. 서기 2000년의 미국의

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였을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응징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며,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대북정책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북한체제의 붕괴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합의한 북미합의서를 철저히 지키고 미국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체제붕괴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1991년 12월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시행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한국의 포용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4. 북한의 안전보장의 의미

북한은 한국전쟁을 도발한 후 미군 즉 UN군의 참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체제의 붕괴 직전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무력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미군과 외세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분단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체제유지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미군의 철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끝났으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선순위의 제1위에 두

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강화시켜 왔다. 휴전협정후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비롯해 새로운 무기를 한국에 도입하고 남한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억지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최신무기의 반입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군비와 군사력을 확대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군사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서는 6·25동란의 경험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증강은 물론 국방의 자주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군의 철수도 적극 반대했다. 그것은 북한이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언제 남침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대북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에 배치되어 있는 200만 이상의 지상군과 최신무기를 그대로 배치하여 놓고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시킬 수 있었는지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이다. 북한과 남한은 안보 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군비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전쟁이 발생할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군비축소와 군비통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남북간의 대결과 분쟁은 종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시키는 첫째 조건은 중국과 미국이 화해와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으며, 둘째로 한반도의 군비축소와 군비통제로 남북간의 군비경쟁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위험은 항상 존재할 것이며 냉전구조는 해체시킬 수 없는 것이다.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중국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미국, 중국, 남·북한이 4자회담에서 토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해체는 물론이고 평화협정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남북한의 방위병력을 10만 명의 병력으로 각각 감축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는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군사력 감축과 군비 축소에 대한 김일성의 유훈을 상기시켜서 군비축소의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사이의 군비축소와 군사력감축은 미군철수와 연계시킬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믿는 주한미군문제를 한반도의 군비축소와 연계시키고, 북한의 안보는 중국이 지켜 주고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 준다는 조건으로 북·미, 중·한,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 바 매우 크고 또 한반도 전쟁재발의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공헌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이 매년 2억 9,000만 달러의 방위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이 계속된다면 한·미간의 마찰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영원한 주둔은 불가능한 것이다.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은 변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안보의 개념은 군사력보다 경제력으로 변천되고 있는 것이다. 구 소련은 미국과의 군사력과 군비경쟁에서 경제적 파탄을 초래했고 궁극에는 체제붕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력과 군비경쟁을 지속하였을 때 과연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군사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

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강화했을 뿐 체제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오히려 북한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한의 군비를 축소하고 군사력을 국가방위에 필요한 적정수준인 10만 군으로 각각 감축하고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북한이 제네바에서 핵동결협정에 서명하여 놓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위한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미사일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북한은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위협역할을 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중단시키고 또 북한의 군사력을 감축하고 군비도 축소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북한의 군비축소와 군사력 감축의 대가로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남한의 군비축소와 군사력 감축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UN 산하의 군축 및 군비통제기구를 활성화시켜서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합의하에 UN 안보이사회의 산하에 「한반도 군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립국의 감시단을 북한과 남한에 파견하여 상주시키고 군축을 감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한미군은 UN의 평화유지군으로 대치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면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동서진영이 분쟁을 조장하고 맹방국가의 안보를 지켜 주었기 때문에 UN기구의 역할이 매우 약화되었고 부진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한이 UN의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UN헌장을 준수하고 UN산하기구의 구성과 감시를 받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은 남한을 설득하여 UN 안보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제기구의 역할을 존중하고 감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미·소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생겼으며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으로 변화되어 휴전협정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중·미간의 협력과 UN기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시와 개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치되면 한반도의 군축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현존하고 있는 휴전선의 확대를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다. 쌍방 2km 거리의 휴전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북한측의 휴전선을 압록강까지 확대시키는 동시에 한국측의 휴전선은 부산까지 확대시켜 놓을 수 있다면 한반도 전역이 비무장지대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어느 한 쪽이 먹히거나 먹는 통일보다 평화적인 통일 방법만이 남북한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미·소간의 냉전구조는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권이 붕괴됨으로써

해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남북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한 해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에서 얻은 경험으로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를 증가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6·25동란의 경험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군비축소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안보의 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한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의 군축은 미·중간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감시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UN기구의 비편파적이고 공정한 사찰과 감시하에 군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UN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UN의 회원국이다. 제3자인 UN기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시와 사찰을 통해 한반도의 군축과 군비통제를 수행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인 동반자가 되고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대만문제를 중국에게 양보하고 중국은 북한문제를 미국에게 양보하여 미·중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도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것은 미국 공화당의 보수파들이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1994년 10월 21일에 서명한 미·북기본합의

서 (The U.S.-DPRK Agreed Framework)가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비판은 북미협상이 시작된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8월에는 금창리의 지하의혹시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고조되었다. 8월 31일에 북한은 다단계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북한이 북·미기본합의서를 서명만 했을 뿐 핵동결은 이루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동결 대신 다른 지역에 핵시설을 옮기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북·미합의서에 서명했을 때 남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을 소외시키며 미국과 협상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팽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은 협정에만 서명해 놓고 수행하지 않는 국가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미국내의 여론은 제네바합의서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했다.

미국내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2000년에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시행한다. 공화당은 클린턴정부가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을 기뻐하며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어 갈 목적이 있다. 만약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원이 미국의회를 장악했을 때 대북정책은 180도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이 당근보다 채찍정책으로 바뀌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바뀌었을 때 북한이 당면할 긴급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을 유지하고 평화정책이 지속되게끔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을 도와 주는 것이 북한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를 미국의 민주당정부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유지시키고 북·미수교를 성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포용정책을 수용하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 곧 대미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한국과 고위급회담을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북한은 클린턴정부를 돕게 되는 것이며 북·미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북,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유지하는 데 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매년 2억 9,000만 달러의 주둔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용적인 북·미,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주한미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내의 정치현황을 좀더 정확히 판단하고 강경보수파의 강경노선은 북한을 체제붕괴로 이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유화정책을 유지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북한 체제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토 론〉

사회자: 먼저 길영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길영환: 냉전의 교훈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요즘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학자와 또 세계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논의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토픽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이 패널에서의 임무는 리차드 채드윅(Richard Chadwick) 교수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 논문에 대한 토론입니다.

저는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통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느냐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드윅 교수의 요지를 따라가면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반도가 아직도 탈냉전기에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고 또 마지막 남은 냉전지역으로서 이것이 소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으로서 한국이 안고 있는 ‘안보딜레마’ 또는 ‘안보위협 인식’ 등은 가급적 빨리 소멸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문제는 이제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물러나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분간 탈냉전 이전의 긴장이 한반도에서 불가피하고 특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에만 냉전이 존재하는가?”하는 질문이 자연히 제기됩니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이 살아 있고 남북한이라고 하는 상호적대적이고 대체적인 두 개의 정부가 대치하고 있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으로서는 이러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과거 50년 동안도 그러했지만 아직도 남북간의 정통성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드워 교수는 논문에서 한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한을 확실히 구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다루면서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다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남북한의 확실한 입장 차이를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드워 교수는 다섯 개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해체해야 하는가'와 둘째는 '해체할 것이 있다면 과연 누가 해체할 것인가, 이것은 한국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인 개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분쟁의 대결 또는 중국의 역할, 한반도를 둘러싼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세번째로는 북한의 가상적 변화조치를 다루었습니다. 대밍(W. Edwards Deming)이 2차 대전 이후 일본을 바꾸게 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신축성을 보이고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상적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네번째로는 일본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일본과 북한간의 정상화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네마루가 1991년에 평양에 갔을 때 일본 내에서는 정당간의 합의 등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 활용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붕괴하거나 현상유지를 통해서 생존을 해 나간다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대미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채드워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스스로 냉전체제 해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서 그것은 한민족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즉 주변국가들이나 상대국에 과거처럼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냉전체제가 해체될 수 있는가'와 '그것이 어떻게 언제 될 것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가능성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경험적 증명과 분석을 통해서 또는 가설이나 테스트, 설명을 통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드워 교수님의 요지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고 계십니다. 채드워 교수님은 '대외정책 결정과정'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한 한국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전의 기원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냉전의 교훈은 한국전쟁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한국전쟁의 결과와 원인'에 대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왜 전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소멸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역사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여러 학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통파학과, 수정주의

학과와 포스트 수정주의학과(Post Revisionist School)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게티스는 세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냉전은 하나의 긴 평화의 과정으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냉전을 일으킨 사람과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극체제가 생겨나고 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고, 서로 부딪히고 또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상황에 안보딜레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략적인 행동들은 안보문제에서 비롯된 불가피론의 입장입니다. 이상이 포스트 수정주의학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왜 냉전이 갑자기 없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학파, 세 개의 분석 레벨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첫번째 분석 레벨은 ‘개인 레벨’입니다. 예를 들어 레닌,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개인 연구를 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레벨은 ‘국내정치 레벨’ 또는 ‘국가 레벨’입니다. 스탈린의 페레노이아 또는 김일성의 과장된 자기이미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극체제 즉 ‘국제구조 레벨’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쟁과 분단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냉전 소멸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배경과 역사 등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1980년대부터 냉전구조의 해체가 시작되었으며, 1994년과 1999년은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 소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촉발요인’,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한 신사고(新思考), 또는 브레즈네프나 안드로포프나 체르넨코 같은 소련의 지도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례 등이 냉전 소멸을 촉발하지 않았는가 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적인

영역 확장, 강대국의 성장 또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사건 등을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이념적인 경직성, 경제실패나 통제경제 실패, 정부유지 능력의 부족 등입니다. 예를 들어 SDI같은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시작했을 때 사실상 소련은 이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반도 냉전을 해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고 많은 종류의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정일은 57세입니다. 아직까지 죽을 나이는 안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죽게 되거나 또는 북한의 군부 내에 분파갈등이나 식량부족, 경제난 등으로 민심이 소란해짐으로 해서 한반도 냉전 체제의 종식 요인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지도자들이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냉전은 과거의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없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 역시 전쟁 없이 끝나야 될 것입니다.

배정호: 김일평 교수님의 논문을 토론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논문들 통해서 미·중관계를 축으로 한 동북아 역학관계나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북유화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바뀌지 않도록 북한은 대미 신뢰관계 및 관계개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참 의미있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한반도 냉전구조체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존재와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님이 중국 전문가이시고 논문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미국은 대중국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북한문제를 대만문제와 연계시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미국은 대만문제를 중국에 양보하고 중국은 북한문제를 미국에 양보하여 미·중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면 한반도 냉전구조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입장 강화 또는 대만문제 해결에 의한 한반도문제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중국의 전략에 관한 분석을 근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북한과 중국관계를 볼 때 중국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파워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어서 현재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동북아 역학구도로서의 미·중 역학구도가 가진 전략적 의미(물론 일본, 러시아도 있지만) 등을 고려를 해 볼 때 이 문제가 대북포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주변국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문제입니다. 주한미군문제는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문제와 중국, 북한관계와 관련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군비축소와 군비통제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미군철수와 연결시킬 것이며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지역에 있어서 대북억제 기능도 있습니다만 보다 넓게는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적인 역할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주한미군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의 역할을 하는 지역평화군으로 주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입장 변화입니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한국을 배제한 대미 평화협정체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 볼 수 있고, 북한 대외관계의 생명줄인 대미관계의 협상용 카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한미군과 관련된 입장 변화에 대해서 중국입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관계가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없다는 비관적 분위기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전 외국 전문가들과의 논의 속에서 독일통일과 관련한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독일이 통일될 수 있는 요인과 독일의 통일환경 조성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21세기 유럽의 발전을 위한 ‘유럽의 단일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독일통일을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결국 지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유럽의 대통합’이라는 보다 큰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북아지역에도 21세기의 동북아 번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한·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대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는 지지하는 입장이고, 미국,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금년 1월에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6자회담은 4자회담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자회담이 한반도문제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강국(global power)인 미국과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인 중국과의 갈등관계로 인한 악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경우와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것과 같이 대북포용정책이 2~3년 동안 지속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경우의 문제도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의 차원에서의 남북한관계와 보다 넓은 차원인 아·태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지역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적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있고 또한 글로벌 파워로서의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전체가 변형할 수 있는 ‘년제로섬(non-zero sum) 게임’의 모델을 개발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자회담을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절실하게 이 민족문제를 생각하는 절실한 입장에서 저는 전략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관: 김일평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대단히 정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주장하신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별다른 이견 제시보다는 두 가지 코멘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냉전구조 해체에 있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기 위해서 미·중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미·중관계를 냉

전관계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중간의 냉전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냉전관계도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근 미·중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특히 스파이문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양국관계가 좀 미묘하게 전개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정부도 미·중관계가 냉전관계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작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국 정상간에 미·중관계를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냉전관계로 규정하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미·중관계가 냉전적인 대립적인 관계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중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인 인권문제, 무역마찰 등의 문제와 한반도문제를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자회담이 한반도문제와 미·중간의 다른 현안들의 연계를 끊는 제도적인 장치로 활용가능성과 그리고 한국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유도되도록 효과를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1980년대 말 유럽의 냉전해체과정을 보는 경우에도 유럽 전반의 냉전구조가 해체되어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면서 NATO 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대립·갈등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방식으로 한국정부가 외교적 능력을 훌륭히 발휘한다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통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군비축소·군비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군비축소·군비통제 문제는 냉전구조 해체의 전제조건 또는 필요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고 어떤 포맷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북한 쪽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지 철수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고 조만간 어떤 태도 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철수를 바라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는 경우, 이는 중요한 어떤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남북한간에 가장 핵심적이고 미묘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해결된다면 그 동안 불가능했던 남북한간의 관계가 질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북한의 의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경우 중국과 북한간에 전략적인 견해차가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을 해 왔습니다만 만약 북한이 그러한 견해를 벗어나서 진정으로 어떤 지위 변화만을 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국의 입지는 좁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 안정자로서의 미군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냉전구조 해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

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두번째는 '남북한관계 차원'에서, 세번째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외교력의 강화입니다. 주변국가들에게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펴야 합니다. '현상유지'보다 '현상변화'인 냉전구조 해체가 주변국가의 국익에 더 부합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를 설득해 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실제 외교력을 통해 설득해 내는 작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3년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베이커 국무장관의 자문을 했던 로버트 젤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독일통일 외교과정에서 미국정부가 서독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통일정책을 후원해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국내 여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상당한 지원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미국의 국내여론이 일반국민들에게 독일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고 이와 더불어 독일의 외교적인 노력이 상당히 주효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여론 주도층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 금창리 핵의혹시설 문제를 놓고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종의 포괄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관심은 현안 문제인 미사일문제와 핵문제에만 있습니다. 안보문제는 결코 경제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안보위협을 만들어 내고 또 다른 카드를 만

들어 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좀더 근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설득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여론 주도 층과 국민들에게 미국정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에서도 이에 상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남북한관계 차원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와 햇볕 정책의 시작 자체가 냉전구조 해체 작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남북한간의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문제는 국내 여론 형성의 문제 또는 전국민적인 합의의 형성문제입니다. 외부 환경과 현실의 빠른 변화에 비해서 사람들의 심리나 사고방식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합니다. 지금 신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부가 몇 년 후에 다시 바뀌면 아마 대북정책도 다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과 정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구사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경분리나 햇볕정책이라는 강한 논리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과정에서나 외부정세의 급변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전국민적인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만 외부상황 변화 등에 기민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국내적인 차원에서 심도 깊고 광범위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lexander V. Vorontsov: 저는 채드윅 교수님의 논문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냉전구조 해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냉전구조가 직접적으로 군사적·정치적 구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있다는 데에는 모두가 합의를 할 것입니다. 유럽 역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들은 이와 같은 선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NATO와 같은 경우에는 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유고슬라비아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NATO는 평화적인 기구라고 선언을 했지만 냉전적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코소보지역에 대한 공습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소련은 북한과 1961년에 군사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계속 증진되고 미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간에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채드윅 교수는 한반도에서 강국의 역할을 지적하셨는데, 매우 흥미를 끄는 지적입니다. 통일에 대한 전망과 통일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토론되어지고 있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4강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토의를 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통일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와 무관심한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통일한국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이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한국이 어떤 외교정책을 펼 것인가 그리고 통일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상당히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많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굉장히 직접적·효율적으로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데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미국과 남한의 입장에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이 통일한국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간의 군사동맹관계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관계를 맺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유럽에서 NATO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극동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세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은 분명히 정치적·군사적 결정을 포함한 아주 복잡한 결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누가, 언제, 한국의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바로 러시아와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위관료인 로세콘 하마보프의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의 외교정책,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우선 순위를 제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한국의 중립화' 실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정부가 한반도에서 설립되고 외부세력이 한반도에서 철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국익에 있어서 최소한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중립적 위치를 지키는 문제가 러시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분명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며 통일과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통일한국과 같은 힘있는 나라의 군대가 다른 제3국가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국경선 근처에 주둔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중국 역시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국제문제를 연구한 교수를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 주둔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정책,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그리고 대화정책은 냉전구조의 장애를 해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토론자분들의 심도 깊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이신 리차드 채드윅 교수님과 김일평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드윅: 현재까지도 남북한간에는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냉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사실상 경쟁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상황 역시도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시작과 관련하여 저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외부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의 경우도 사전에 계획된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냉전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김일평: 배정호 박사께서 지적한 중국과 북한과의 전략관계, 중국

과 미국과의 전략관계문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전략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중국과 북한과의 인적 교류, 인맥 등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와는 상반된 입장에서는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가능한 우호협력을 통하여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영관 교수께서는 한국이 주도가 되어 4자회담 등 주변국관계를 이끌어 가는 외교적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하셨는데 당연합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외교관료층에서는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아이디어와 추진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역시도 대중국관계 구축 과정에서 미 국무성 관료세계에서 새롭고 현실적 방안을 도출할 수 없어서 헨리 키신저 같은 인물들을 초빙하여 비밀리에 일을 추진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어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냉전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즉 한반도 분단을 가져온 냉전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전체와 부분의 논리’, 즉, ‘안보환경과 한반도문제’입니다. 한반도문제는 주변환경이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생태적 결정론 또는 세력균형 결정론적인 시각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여러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동북아에 구축되어 그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문제 해결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한·미관계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에는 기술적·

법률적·절차적 난관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2 회의

- 주 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북한 호응 전망」
- 발 제: “북한의 개혁·개방 방안”
陸忠偉(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서재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 회: 최상룡(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자: 박종화(대통령 통일고문)
이경숙(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야마모토 타다미찌(일본대사관 공사)
C. Kenneth Quinones(주한 아시아재단 대표)

North Korea: Way of Reform and Opening Up

Zhongwei Lu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1. Comparison with China

After the Cold War, there emerged two international trends, namely the economic globalization as well as the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These two tides, to all the countries, have assigned a cross-century task of policy formulation with both challenge and opportunity. This is not only a diplomatic problem but also needs internal adjustment in each country to make their direc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compatible with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Otherwise, those states away from the global trend will therefore become an "isolated island" in world economy.

Tracing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i.e., the historic experiences of the socialist countries, we may see that reform and opening up is an arduous and complicated systems engineering without any ready cases to follow. Its success comes from the courage, perseverance and strong will of the leadership, yet also needs suppor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stable circumstances and friendly neighbors. Currently, almost all the socialist countries, for instance, China, Vietnam, Russia, Cuba, and Romania, etc., are conducting reform programs. However, due to their individual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ese reforms have been addressed in different names and pushed forward with distinct forces and paces.

To look at China's twenty-year experience, reform has stood as a revolution, which is to transform thoroughly the economic structures fettering the productive forces. In view of its strenuousness, there is no way to succeed in reform at one go. Instead, it has to go through a considerably long historic process. For this reason, as guidance of reform, China initially proceeds

with caution, just like crossing the river by feeling the stones, gets a bit of good experience in practice, and then forms a general idea. In this way, the reform can be encountered with less barriers and shocks.

A. This can be viewed as an ideological revolution or renewal of conceptions. During the twenty years, China has carried out three revolutions in the field of ideology. (i) Revolution in Philosophy: This is to replace the theory of "Two Alls" (All policies that Chairman Mao makes will be resolutely implemented; all instructions that Chairman Mao gives shall be consistently followed) with "seeking truth from facts", removing ideological obstacles in the formulation of reform policies. (ii) Revolution in Economics: From the acknowledgement of commodity economy and law of value to the recognition of market economy and shareholding system, the traditional economic thinking which puts mandatory planning on top priority has been rejected. (iii) Revolution in the Theory of Socialism: It reviews what is socialism and how to practice socialism. In particular, Deng's 1992 remarks during his southern China tour smashed the bonds of the old notion that equates socialism with planned economy and put forward the theory of primary stage of socialism. These three revolutions have made up China's ideological basis for reform in economic structures.

B. China's policy for development always rests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refusing to copy indiscriminately the foreign model and discarding those reform programs designed by others which have proved to be inconsistent with Chinese national conditions. China's reform started in the rural regions, which mobilized the enthusiasm of the 8 hundred million peasants and offered markets to the cities. Yet in the urban areas, there first saw reform in private enterprises, followed then by rectific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Likewise, the opening up was initially practiced in the coastland and was gradually pushed on to the interior until at last an all-round opening came on the scene.

C. The experience shows that reform requires a st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At the beginning of opening up, China's respective relationships with America and Japan was in honeymoon. The year 1972 witnesse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and six years later,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In 1978, China and the U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hree nations then were faced with a common strategic task, that is, to deter the Soviet from forging southward. In addition, attracted by the great potential of the Chinese market, the financial groups in America and Japan have been vigorously develop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has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foreign capital and management expertise.

D.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benefits from the favorable Asia-Pacific environment of economy and trade, especially from the expected rising regional economy as well as the growth of market capac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America and Japan. In 1970s, the US market was basically open. And similarly, the 1980s' sheer rise in the exchange rate of Japanese yen led to the large-scale increase in the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enterprises to Asia and China alone. In conclusion, China's success in reform and opening up should be attributed to the emancipation of mind, transformation of idea, full use of external conditions and a step-by-step process. These, we might say, are the precious experiences of Chinese reform.

2. North Korean "Partial Reform"

D.P.R.K. presently stands at an important historic crossroad where it has to make strategic decisions, i.e., either reform and opening up or cutting off itself from the outside world. To be specific, in terms of reform, does North Korea have a strong will? Would it possess the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similar to that of China in those days? And in operation, how can North Korea choose an evolutionary way of reform that conforms to its own conditions? These problems have attracted most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everyone knows, national economy is a big system with

interrelated, mutually promotional yet constrained branches. The rural reform, urban reform, and reform of managerial system are all component parts of economic restructuring. Since the 1990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centralization of planned economy, changes have taken place in some North Korean policies, such as policy on economic development, agriculture, economic structure, foreign capital and frontier trade. Furthermore, some young technocrats have been put in various positions and cadres have been sent abroad for investigation on market economy. Besides, D.P.R.K. also attaches importance to analysis in Asian financial crisis as well as in experiences and lessons of China's opening up, doing particularly case studies on the individual reform plans implemented in different regions of China. In view of the above changes, North Korea has indeed made some reforms in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However, in general, these programs have not touched the economic structure, hence have not gone beyond the pattern of "partial reform"

A. Without theoretical breakthrough, reform of economic structure is deemed to be forbidden. The North Korean media still disseminate that "reform" does not suit the country and that "planned economy is superior to market economy", etc. Last year, an article published in "Rodong Shinmun" (Labor News) warned that the capitalist economic reform would bring about nothing but the sort of disastrous consequences experienc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refore, North

Korea will resist any temptations to get it affiliated with the "integrated" world.

B. In May, 1998, North Korea made amendments to its constitution, legitimizing Juchi. This suggests that the country will still adhere to its former ideological route and "use Juchi to guard against the corrosive influence of western thought". Yet it also shows the D.P.R.K. unwillingness to open up its door all at once.

C. Self-reliance will become basis for the formula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This is because that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is not the absolute negation of the socialist system but the self-adjustment and self-improvement of it. At this point, China shares the common view with North Korea who will not adopt the "shock treatment" similar to that of Russia. Nevertheless, just like China before the 1980s,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manage well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liance and opening up, setting the two contradictory with each other. At present stage, for many reasons, North Korea will still make constructions with its door closed, which is to emphasize on internal capital accumulation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o take foreign trade as supplement to national economy.

D. North Korea is confronted with security pressures in many ways. (i) Left-over problem of the Korean War, that is,

substitution of Truce Agreement by Peace Treaty; (ii) Cold-War legacy, i.e. economic sanction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America and Japan, and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ii) Task in the post-Cold War era, i.e.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se varied factors have left very little latitude for North Korean diplomacy, putting the country in a relatively isolated international position.

The socialist construction in North Korea requires a lasting stable environment to ensure that the country approach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pens up business in world market, and makes progress in economic development. Yet today's North Korea is much too different from China twenty years before. Moreover, the US and Japanese financial groups have little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market. Although there established special economic zones like Rajin-Sonbong, foreign investment has been few and far between, which forms a sharp contrast with the case of China.

E.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the instability of the world financial market have made North Korea notice the snares and dangers of globalization. Consequently, regarding the opening up of market and the adjustment in policy, North Korea will handle the issues with great care. In the establishment of export-oriented economic structure, the country will be facing serious problems. Likewise, more intense competition is also to be seen in the

invitation of outside investment.

3. How to Promote the North Korean Reform and Opening Up

From the above analysis, we can see that domestically in North Korea, there does not yet exist desires and conditions for an all-round reform and opening up. Therefore, to promote the country's reform, efforts should be made first from the non-ideological sphere, starting from the improvement of its external environment,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its productive forces, cooperation in its introduction of outside investment, as well as contribution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the acceptable premises for North Korea, the country can be expected to, step by step, develop rapidly in economy, heighten its dependence on foreign trade, and at last participate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 Regard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North Korea, its respective relationships with the US and Japan has not yet been normalized. Besides, there is no regular channel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either. Without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North Korea still has a very strong sense of insecurity for itself. In addition, due to the increasing disparity in comprehensive national might, changes too have taken place in North Korea's traditional security alliance with Russia and China.

Accordingly, the chief policy task for North Korea is to extricate itself from the diplomatic isolation. For this reason, the United States should quicken the pace for the normalization of its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then bring along the relaxation of the Japan-D.P.R.K. tension. South Korea, based on peaceful resolutions rather than isolation or containment, needs to proceed from the situation as a whole and take the initiative in contacting the North, in order to promot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t present, North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Four-Party Talks. These developments manifest North Korea'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communication, if not the desire for it. In general,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all indicate by concrete actions that they actually do not wish to destroy the North, neither by annexing it nor through urging the collapse of the country.

B.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North Korea summarized the "3rd seven-year plan"(1987-1993)in 1993 and brought forward new strategy for economic constructions. Specifically, it set a two or three-year "buffer term" for economic building and established guideline for economic strategy, which give first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light industry and trade. In recent years, these three "priorities" have given way to heavy industry, energy industry, and transportation. This policy is somewhat similar to the "inclined production" practiced by the postwar Japan in its early economic revival, that is, to concentrate

all the resources at hand for the expanded reproduction. This, we may say, is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economy. Moreover, the country has also drawn on the experience of China in agriculture, altering the highly centralized management pattern by the practice of "remuneration-output linked contract system". In view of the above-mentioned transformation, China, US,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help the North break the economic bottleneck to bolster up its adjustment in industrial structure, for example, by extending assistance in oil, food, and fertilize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ught to raise funds and offer heavy oil, implementing conscientiously the "Agreed Framework". In the light of its own 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 South Korea should expand its aid of idle equipment to the North.

C. To facilitate North Korea's invitation of outside investment, America and other western powers need to lift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D.P.R.K. This will be followed by many positive effects. Firstly, it may eliminate the Cold-War sequelae, ease the tensions of nearly half a centur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ultantly remove the danger of war. Secondly, it can promote the economic exchanges with D.P.R.K. Currently, South Korea has decided to further soften up its sanctions on trade and investment to the North. If the US and Japan are to relax the restrictions, then this will help the North introduce necessary funds and technologies, develop labor-intensive industry, promote construction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Rajin-Sonbong, etc., expand

business scales and adjust trade structures. Hence consequently North Korea can b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 With respect to the promotion of North-South reconciliation, South Korea, as the major economic supporter and future business partner with the North, should attach more importance to the big interests rather than the trivial ones by taking the initiative to avoid crisis or military conflicts incurred by sudden incident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two sides have been in the long-term antagonism with deep-rooted hostility and suspicion toward each other. What's more, they also have distinct social systems and ideologies. Thus, President Kim Dae Jung has proposed the exchanges of envoys and summit meetings, stating that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more important than reunification." In April, 1998, General Secretary Kim Jong Il also said that "all Koreans, no matter in North, South or abroad, should visit and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for the enhancement of dialogue and cooperation."

All these actions to increase trust and clear up doubts can become significant basis for the gradual improvement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The two sides should frequently hold meetings concerning Red Cross, economy, and sports or develop dialogues at congressional and premier level, so as to replace suspicion with trust and turn confrontation into dialogue.

4.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Currently, North Korea is encountered with security pressure from three spheres, which has constituted the external causes of the continuance of traditional economic system as well as the D.P.R.K. hesitation in carrying out reform thoroughly. In other words,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constancy in internal system, North Korea will seek to find a way out in diplomatic relationships and relations for foreign trade and economy. A breakthrough at this point is the improvement of D.P.R.K.-US relations, with which the whole diplomatic scene can be expected to be invigorated, so as to strive for a comparatively stable environment for economic constructions. Thus the country may pursue more economic assistance, capital and technology to vitalize its national economy. It then can be inferred that if there comes significant enhancement in the coefficient of D.P.R.K. external security, domestic pulling through of the famine as well as extrication from economic strait, North Korea will be able to promote its production with internal adjustment as the driving force and consequently participate in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has lasted for nearly half a century. In recent years, due to the unremitting efforts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ituation has seen some progress as the

Four Party Talks enters into the substantial stage. All sides now devote themselves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peace system for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one so as to accomplish the permanent peace and stability in the peninsula. Thus, the United States and those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South Korea and Russia, etc., should keep in mind the thinking of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This, as a matter of fact, is the key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Therefore, we should transcend the differences in ideology, system and belief, decide the case in its merits, foster the new thinking which acknowledges coexistence of two social systems as well as complementarity of two economic systems in order to achieve finally common prosperity and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However, in doing this, the Cold War mentality, idea of conflict between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must be rejected first. In all, North Korea's own way of development ought not to be interfered. Let it go ahead with its planned economy while others conducting market economy. There can be competitions between the two different economic systems instead of overstressing the basic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in social system, political system, ideology, and values. Anyway, it's better to make friends than make enemies.

After the Cold War, Americ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successively adjusted their respective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 The common expectations in this adjustment are to maintain stability, promote unclear-free zones, prevent conflicts,

urge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ease the tension in the peninsula. The U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can be valued as flexible, which advocates engagement and dialogue in order to include D.P.R.K.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encouraging "soft landing" in the country. Since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North Korea with abundant capital, food, heavy oil and so on, which resultantly relaxes and improves the bilateral relations. Likewise, the "sunshine policy" practiced by South Korea also reflects the thinking of coexistence with the North.

One point of view held by some scholars regards the "treatment of Chinese medicine" more efficacious and realistic than the western "operation" in the contacts with North Korea. This opinion actually embodies much thinking of "soft landing" whose main logic is as follows: North Korea is not Iraq, and the Korean peninsula is different from Persian Gulf. In view of the complexity of big power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hould pursue security by cooperation on one hand, striving for stability based on the goodwill and sincerity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the other hand, security and stability should be pushed forward through consultations, i.e., to seize the right time for flexible compromise. The 1994 Agreed Framework together with the US D.P.R.K Agreement concerning the Jinchangli underground nuclear facilities signed on Mar, 16 this

year can both be viewed as models of "seeking security through consultaion.". This policy is conducive to the improvement of US-North Korea relations and helps to ease the tension in the peninsula by avoiding diplomatic dead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nuclear suspicion" against the underground facilities. Simultaneously, it has as well given us the following inspirations. That is, the situation in the Korea peninusula is still explosive. If such crises are to arise in the future, all sides would still need to make ingenious use of their respective influences to make peace through negotiation instead of recklessly threatening for air raid or "preventive strike"

In addition, in the adjustment or making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western strategists should not consider "whether D.P.R.K. would collapse" as the premise for policy decision, since Kim Il Sung passed away, North Korea has enjoyed political stability and good social order domestically, hence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l turmoil should be excluded on the whole; yet economic difficulties concurrent with sustained famine has put national economy in the predicament of reduced reproduction. Nevertheless, these frustrations, far from being an issue of survival, can be regarded, to a large extent, as contradictions in development which require a long-term solution. Since 1995, the United States, China, South Korea, and Japan have all offered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1996, a "Five-year Agreement" has been signed between China and D.P.R.K., according to which China is obliged to provide five hundred thousand tons of food for

North Korea each year on favorable terms. That proves then serious famine will not lead to the collapse of country. Among the socialist states, for instance, in the case of Cuba, Vietnam, former East Germany, as well as those Eastern Europe countries led by former Soviet Union, none of them broke down for economic difficulties. China itself also suffered from the grave three-year natural calamity in 1960s when people in many places starved to death. However, social upheaval did not emerge as a result.

To coexist with North Korea, the countries concerned should not overstress the dispar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rehensive national might. Instead, North Korea's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needs to be well noticed. This is because that having developed for nearly half a century, the country has already laid a comparatively solid foundation for its national economy.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should be viewed separately from its potential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Nobody denies that North Korea possesses rich mineral resources and highly qualified labor force which is the cheapest in region. Provided that these favorable factors are combined with outside elements of production, e.g., direct investment, technology transfer, and enterprise management, etc., the North Korean economy can be expected to enjoy significant improvement.

To coexist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South Korea and Russia should have the patience and forbearance to tackle the issue in the long run instead of seeking immediate

interests. Besides, hostility and misunderstanding should also be removed in this endeavor. This is important prerequisite for reconciliation. It is especially true for the North and the South who disagree with each other in the way of unification. North Korea proposes "federalism" based on one nationality,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wo government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South Korean policy. Therefore, they need to rely on the four "Cs", namely communication, confidence, cooperation and common interests to put aside differences and seek common grounds, though this will be a long and tortuous process. Another case in point is Japan's North Korea policy. As we know, Japan once put North Korea under its colonial rule and will be required to make reparation sooner or later. However, Japan seems to lack right understanding on its invasion history. Some Japanese right-wing forces still view invasion and colonial rule over North Korea as "annexation". In all, the normalization of Japan-D.P.R.K. relations cannot not be put on agenda unless Japan makes an appropriate settlement of its past. Even if the two sides sit down for substantial negotiation, their bargaining on the amount of war indemnity and talks over Japan's understanding on history will have to go through a tough and dreary process. This, as a result, will call for sincerity from both sides to enhance engagement and dispel misunderstandings.

To coexist with North Korea, we also need to help the country pull through the current economic straits. The major problem for North Korean economy at this time is the shortage of capital,

food, energy, electric power and agriculture-related materials. To find a way out, North Korea has already tried a variety of approaches to seek for foreign assistance, showing great flexibility.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increase aids of food, energy, fertilizer and electric power, proceeding from the promotion of economic recovery and long-term development in North Korea.

To coexist with North Korea, we need to give an objective assessment on North Korea's development trend, in other words, the prospect for its "reform a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We may find that it is much unlikely for the North to launch a radical reform 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the near future. In fact the wording of "reform and opening" has already been rejected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Yet in the long run, there still exist possibility of large-scale adjustment(not reform). While handling its economic problems and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i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North Korea will be sure to find a model for economic development that conforms to its own national conditions.

□ 국문요약

북한의 개혁·개방 방안

본 글은 북한의 개혁·개방 방안에 관한 구체적 고찰이다. 주로 중국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비교, 그리고 북한 실정을 고려한 대안의 제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개혁·개방 방안의 고찰을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를 비교하고 중국의 경우와 다른 북한의 실정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거와 그 대안으로서 북한과의 공존을 이루어내기 위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1. 중국과의 비교

냉전 이후 국제적 조류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즉, 신기술 혁명(new technological revolution)과 경제적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조류에 따라서 세계의 국가들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세계 조류에 부응하지 않는 국가들은 당연히 고립된 국가(isolated island)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러시아, 쿠바, 루마니아—이 최근 들어 국제적 조류에 힘입어 개혁·개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서로 다른 발전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부적·외부적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년간의 개혁·개방과정은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였고 일반적인 개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서 성공적이라는 평

가를 받을 수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이데올로기 측면의 개혁이다. 이는 철학, 경제, 사회주의 이론에서의 혁명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개혁은 독립과 자립에 의한 혁명이다. 이는 외국모델의 무분별한 수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중국적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혁·개방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 국제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다. 이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데올로기의 해방, 사고의 전환 및 외부적 조건의 완전 활용 및 단계적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북한의 “부분적 개혁”

개혁·개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 농업, 경제구조, 외국자본, 무역에 있어 정책을 변화해 왔다. 시장 경제 조사를 위해 당간부 요원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방에 따른 경험적 성과를 토대로 하는 개혁계획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등 생산력 향상에 관한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들어 나가는 일반적 방안은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아닌 부분적 개혁에 그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방송은 북한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대해 여전히 보도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불합리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립(self-reliance)을 내세우면서도 폐쇄적 정책구조를 여전히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중국이 경험했던 개혁·개방과는 판이하게 다른 무

역구조—나진·선봉의 경제특구에 대한 낮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취하고 있다.

3. 북한의 개혁·개방 증진 방안

북한의 내부적 상황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루어 내기 위한 내부적·외부적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부터 개혁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외부환경 개선과 지원으로부터 남북한 화해, 생산력의 향상, 대외투자 도입을 위한 협력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북한은 단계적 경제성장과 대외 무역의존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외부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보불안에서 탈피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 것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 주는 등 북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4. 북한과의 공존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문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존(coexistence) 문제에 달려 있다. 공존의 문제는 환경을 안정시키는 가장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와 체제라는 두 가지 문제들이 상호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과의 공존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배제적 요인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안정유지, 비핵화시대의 건설, 갈등예방, 회담과 협력논의, 남북간 긴장완화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구체적인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변국가들은 경제적 불균등과 국력차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반세기 동안 경직된 경제문제는 북한경제의 잠재성과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천연광물자원의 가치를 고려한 외부조건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투자와 기술, 운송, 기업 면에서 북한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보아야 한다. 북한의 호전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북한과의 공존을 위해 북한의 장기적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적 지원 및 북한의 개방·개혁을 바깥 세계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는 배제된 사안 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방안

서 재 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강경책과 온건책, 또는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이 그 양극단이다. 봉쇄정책은 북한을 봉쇄해서 압박하면 붕괴할 것이라는 봉쇄주의적 입장과, 변화하지 않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베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 등 다소간의 변이가 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핵개발, 미사일실험 등 안보위협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론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북 봉쇄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부의 압박이 가시적일수록 북한내부의 체제응집력은 강화되어 체제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회구하는 우리에게 모순적이다. 둘째, 북한은 극한적인 체제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도록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험한 전략이다. 셋째, 주변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위주의 대북정책과 괴리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 외교적 고립, 경제적 파탄, 식량위기, 군사적 압력, 그 어

는 것도 북한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넷째, 대북강경책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여 한국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북한이 당장 붕괴해도 문제이다.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붕괴를 정책목표로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아니다.

대북포용정책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식량지원과 경협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협과 경제지원을 매개로 군사모험주의를 포기하게 하고 남북간에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전략이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를 두고 확고한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새로운 정책적 방향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을 긴장시켰던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등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냉전구조 해체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냉전구조 해체의 전략은 북한의 체제불안과 안보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 불안정이 조성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즉 핵이든 미사일이든 사안별 해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북한의 호전적 행태를 촉발하는 구조적 요인인 냉전구조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포용정책과 냉전구조 해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데탕트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냉전구조 해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남북간

불신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둘째, 미·일의 북한과의 수교를 실현하며, 셋째, 북한이 개혁·개방하여 시장경제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넷째,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하며, 다섯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룩하여 한반도 판 헬싱키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냉전구조 해체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 또는 일괄타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줄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괄타결 방안에는 북한이 호응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포용정책과 냉전구조 해체 정책의 성공의 여부는 북한의 호응 여부이다. 북한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호응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의 노선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에는 군부가 득세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부르짖으며 기존체제 고수에 집착하는 등 정치기류가 강경으로 흐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의 체제위기의 상황을 냉전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버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탄생 자체가 냉전구조 속에서 나왔고, 체제의 발전과 보존이 모두 냉전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이 과연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여, 냉전구조 해체에 호응하여 올 것인가?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에게 전혀 새로운 생존법을 요구하는 것이며 북한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다.

현 상태의 북한정권의 존재양식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은 상호모순적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한이 평화공존하며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발전은 모순에서 시작된다. 모순속에 변화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는 법이다. 북한은 냉전구조속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체제의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 북한은 냉전구조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냉전구조 때문에 고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모순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운명에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면 지속적으로 쇠퇴하다가 결국은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운명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고립-편입의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회주의의 궤적은 동일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필요성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북한이 아직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호로 개혁·개방을 지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의 선택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 직후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다가 다시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곧 북한체제의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과 냉전체제 해체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에는 양면적인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의 경제부문에 개혁적인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등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북한은 매우 완만하나마 매우 소폭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자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산 개방에서도 보듯이 남한의

자본에도 관심이 매우 크다. 이처럼 북한에는 양면적인 흐름이 혼재하고 있다. 주변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북한의 정책방향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의 주도에 북한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냉전구조 해체는 이제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장은 거부하겠지만,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체제와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남한으로서도 냉전구조는 극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이제 남한의 국가발전에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아무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없다. 냉전구조의 해체는 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차원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과제이다. 냉전체제 생성 이후 반세기가 넘었다. 냉전구조의 해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다. 단숨에 한 번의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냉전구조의 해체가 정부의 정책적 목표라고 전제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탐구해 보는 것이다.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인동기는 무엇인가, 그 효과는 얼마만큼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북한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한·미·양국의 포괄적 접근법

체제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은 생존의 수단으로 대량살상의 위협수단이 되는 핵무기 개발, 다단계 미사일 개발로 승부를 걸고 있다. 북한의 이 승부수는 첫째, 남한 및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만이 미국, 일본, 남한의 관심을 끌고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 데 근거하고 있다. 협상카드인 썸이다. 둘째는 외화벌이의 수단이다. 북한은 이미 이란과 시리아에 스커드C를 60여 기 팔았다고 알려져 있다. 셋째, 내부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이미지에 연결시켜 체제붕괴의 불안과 체제에 대한 자신감 상실에 빠져 있는 엘리트 및 일반주민들을 통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것이 제지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위협의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잇점이 있는 것이다. 1998년 8월 미사일 실험과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이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혹은 현실로 드러났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미 의회에서 나왔다. 제네바합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계 의회의원들의 근본적인 불만은 북한이 군사위협을 가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돈이나 다른 지원책으로 순응하는 북한다루기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있다.¹⁾

북한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제까지 북한이 의제를 장악하고 우리 측이 이에 대응했던 관행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북협상을 시작하면서 협상의 주도권

1) Douglas Paal, 미국 Asia Pacific Policy Center 소장, 길정우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과 인터뷰 (1999.2.16).

을 북한에 내준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네바합의서체제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네바합의서는 대북정책의 시작일 뿐이며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²⁾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북정책은 매우 사분오열(fragmented)되어 4자회담, 미사일회담, 식량지원, 미군유해송환 회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을 한데 묶는 큰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포괄적 정책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주도하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반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³⁾

3. 미국에서 나온 두 개의 보고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두 개의 보고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CFR)에서 나온 것으로서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행정부에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공개서한(1998년 10월)이다.⁴⁾ 다른 하나는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방부 차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팀이 낸 보고서(1999년 2월)이다.⁵⁾

2) 제임스 릴리, 전주한미대사, 길정우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과과의 인터뷰 (1999.2.16)

3) Richard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trategic Forum*, No. 159 (March 1999)

4) Report of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1998.10.7)

5) 원제목은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인데, 결론이 Richard Armitage의 이름으로 *Strategic Forum*에 발표되었다.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Strategic Forum*, No. 159 (March 1999)

CFR보고서는 페리 조정관을 임명하도록 한 보고서이며, 아미티지 보고서는 페리 조정관 보고서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고서이다. 두 개의 보고서 모두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기본 접근법으로서 전제하고 작성한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FR보고서는 한국을 도와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보았다. CFR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고까지 제안했다. 아미티지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전략이 한국의 포용정책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R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 핵동결에 성공하고 평화조약을 협상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만, 이 정책이 결국은 북한을 배불리기만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공고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남북한 화해를 진전시키고 못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법은 강력한 억지력, 미국이 북한을 파괴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이 이미 확립한 정책을 따르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며 상호주의적 조치를 위한 큰 패키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공조해야 하며, 둘째, 만약 북한이 위협을 감소하고 화해·협력의 기회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긴장해소와 개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고 받아야 할 것은 받자는 것을 강조하였다.⁶⁾

6) CFR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건의했다.

1.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억지력과 태세 유지 공조

아미티지보고서는 기존 대북정책에 보다 강력한 비판을 펴고 있으나 해법은 CFR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제네바합의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고 규정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제네바합의서 합의시의 기본가정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규정했다. 제네바합의서가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것도 잘못된 가정이며, 제네바합의서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에 점진적 화해를 주도하고 북한의 소프트랜딩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가정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아미티지보고서는 북한이 쉽사리 붕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아가 전체주의체제를 붕괴시킨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스탈린치하의 우크라이나, 모택동시대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아와 정권의 안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를 다 죽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
2.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추구함
 3. 북한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하되 장기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구조 개혁, 모니터링 허용, 인권문제 등에 호응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
 4. 북한에 대한 협상은 한국이 주도하되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
 5.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북한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초기 조치들을 시행
 6.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위협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
 7. 만약 북한이 위협을 감소하고 화해협력의 기회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두어 들임
 8.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본과 공조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 협의를 진전시킴
 9. 미국행정부 고위급 차원에서 북한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임
 10. 제네바합의를 고수하며 KEDO를 지원
 11. 한국의 경제위기를 지원
 12.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국의 목표에 대한 장기적 구상으로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비핵국가, 우방국으로서의 통일한국의 등장을 희망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가정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을 공고화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일본,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미티지보고서는 미국이 군사적 억지력을 고양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해결방법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미티지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생존하는 길은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개방하는 것이라고 믿는 북한지도부의 일각에게 줄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⁷⁾

아미티지는 길정우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과의 인터뷰(1999.2.18)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일본과도 조율을 거쳐 평양에 안전보장과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과 군사적 안전보장을 절실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제안들을 담은 패키지를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북한의 반응을 지켜 보는 것이다.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하여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수단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보장이란 한·미 양국이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아미티지보고서는 협상의 목적은 북한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이득, 안전보장, 정권의 정당화, 아니면 군사적 억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적 협상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Richard Armita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p. 4.

1. 북·미합의서: 1994년 10월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북한은 금창리를 포함한 핵개발의혹시설에 투명성 보장, 사용연료봉을 조기 제거한다. 그에 대한 미국의 보상은 두 기의 경수로 건설 촉진이다.
2. 미사일: 미사일 실험과 수출을 중지하고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북한이 준수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선적을 억제하며 이것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에 의해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3. 재래식 위협: 상호 재래식무기를 감축한다.
4. 식량/경제지원/경제제재: 미국은 인도적 식량, 의료지원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재를 완화하며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한다. 북한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우방과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내에 한국재건기금 창설을 검토한다.
5. 안전보장: 미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의한다.
6. 국교수립: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만족하면 미국은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을 준비한다.

외교적 수단이 실패하면 미국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봉쇄한다. 둘째, 선제예방은 위험하고 어려운 선택인데 수단, 성공여부 평가, 위험에 대한 우방과의 명백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⁸⁾

8) *Ibid*, p. 8.

CFR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는 북한에 끌려 다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경한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새로운 해법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해법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2단계 조치로서 군사적 억지력을 사용해야 하나 군사적 억지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 한국의 제안과 페리보고서

대북포용정책이 미국의 호응을 얻고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한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관심은 금창리 핵의혹 문제를 비롯한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미사일문제 등 단기적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가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냉전구조 자체의 해체를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을 유럽의 데탕트정책을 모델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를 통해서 도출한 헬싱키합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냉전국제질서를 긴장완화와 데탕트의 새로운 시대로 바꾼 분기점이 된 사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임명된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페리는 CFR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가 제안한 북한 다루기 법에서 외교적 협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레드라인 설정)와 외교적 방법 대신 군사적 조치를 사용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페리보고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나 2단계 방법에 관해서는 CFR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가 제안한 수준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6일 한국정치학회 주최 대북정책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과 토론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은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데 어떠한 시간적 한계도 정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대비는 필요하겠지만 1차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2차로, 2차가 실패하면 3차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한 후의 방안이며, 그나마도 영원히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⁹⁾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정책에 공조를 시사한 것이다.

5. 포괄적 해법을 위한 주요 수단 및 로드맵

(가) 개발원조 방법

한·미간에 검토되고 있는 포괄적 접근법이 시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를 주요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일괄타결에 호응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제지원인 것은 두말 할 것이 없다. 북한의 경제실정을 고려할 때 경제카드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지렛대이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구상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북한의 총체적인 경제난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의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미티지 보고서 주장을 경청할 만하다. 아미티지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해

9) 「조선일보」, 1999. 3. 27.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우방과 더불어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내에 한반도개발기금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여기서 우방이란 한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 포기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액수는 30억 달러 수준인데 협상을 요하는 사안이다.

브래들리 밥슨 세계은행 아태지역 선임자문위원은 북한에 대하여 개발지원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국제 사회에 의한 경제지원과 정치적 사안을 확실하게 연계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개발지원으로 점차적으로 옮겨 가며 경제복구와 개발을 위한 교류과정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보다 포괄적인 대북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그램에는 경제제재의 완화, 무역과 투자 관계의 진전, 정부차원의 개발지원과 인도지원의 혼합을 비롯하여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지지 및 자원사용 허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현재 한·미간에 검토중인 대북 포괄적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세계은행을 통한 개발원조 접근법은 북한 변화유도라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개발기금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¹²⁾ 이들 연구들은 원조 협상과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는데 피원조국이 외국원조를 계속받기

10) Richard Armita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p. 7

11) 브래들리 밥슨, "변화직전에 놓인 북한," (미발표논문), p. 12.

12) Teresa Hayter, *Aid as Imperialism* (Great Britain: Penguin, 1971); Cheryl Player, *The Debt Trap: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Third World* (New York: Monthly Review, 1974); Ronald Libby, "External Co-Optation of a Less Developed Country's Policy Making: The Case of Ghana, 1969-1972," *World Politics* (October 1976).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IMF와 IBRD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원조기구들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외국원조를 정치적으로 구사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전환시키는 데는 개발원조를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¹³⁾ 세계은행의 개발원조는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원조기관들은 외국직접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외국원조기관은 원조거부라는 전략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원조는 피원조국가에 대하여 강력한 강제력이 있다. 첫째, 개발원조는 국가주도의 발전유형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한 구조적 종속을 심화시킨다. 또한 개발원조는 민간영역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외국자본의 침투를 개방시키는 데 사용된다. 둘째, 외국원조는 국제자본이 침투하기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원조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편입을 촉진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원조체제에 대한 관계는 그 나라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마뉴엘 윌러스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양식이 곧 그 나라의 경제발전 유형과 정권의 특성을 결정한다.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곧 제3세계 국가에게 자본주의체제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¹⁴⁾

셋째, 피원조국이 원조제공 프로그램으로부터 채무를 지게 되면 채무를 갚기 위하여 외화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지향적 발전모

13) David Baldwin, "The International Bank in Political Perspective," *World Politics* Vol. 18 (1965).

14) Robert Wood, "Foreign aid and the Capitalist Stat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olitics and Society*, Vol. 10, No.1 (1980), pp. 5~6, 33.

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외국원조기관에 채무를 지게 되면 과거의 채무를 갚고 또 기존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외국원조에 의존하게 된다.¹⁵⁾

넷째, 외국원조는 투자영역이 고정되어 있다. 투자기관이 투자대상을 미리 결정해 주는 것이다. 외국원조는 대체로 민간투자를 위한 수송,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건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 산업, 광업 등의 프로젝트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¹⁶⁾

포괄적 접근법을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세계은행 개발원조를 실시한다면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발원조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회복되어 식량배급체제가 정상화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부구조가 변화하면 상부구조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정권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하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용이하며, 하부구조는 반드시 상부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 포괄적 해법의 3단계: 대북정책 road map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접근법이지만 한 번의 협상으로 일괄타결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누

15) *Ibid.*, p. 16.

16) *Ibid.*, p. 18.

되 그것을 북한에게 road map으로 제시하여 단계에 따라 북한이 따라오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미사일 단계: 농업지원

북·미간의 금창리 협상타결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제 미사일협상은 포괄적 협상을 위한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문제는 핵문제인 금창리 지하시설과는 여러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 금창리 협상이 시작 4개월만에 끝났지만 미사일협상은 벌써 4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북한은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대가로 3억 달러 또는 식량 100만 톤을 요구한 데 비하여, 미사일 개발과 수출 포기 대가로 3년간 해마다 10억 달러씩 보상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우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는 미국이 흔히 사용하는 경제제재 완화나 인도적 식량지원 등의 카드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 대규모 경제지원 등의 큰 카드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 29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북·미미사일 협상은 예상대로 결렬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미사일개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 어떠한 국제적 규범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주권의 문제라는 주장으로 버티며 마일측과 최대한 흥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내에 5차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보상을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1년에 한 차례 열리던 미사일회담을 울들어 두 번씩이나 수용한 것은 북한 의도의 일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5월부터 본격화될 대북포괄협상의 의제에 미사일 협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협상만 따로 떼어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북핵문제와 경제제재 완화, 국교정상화 등 현안을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미사일은 일본 및 중국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법에 일본 및 중국의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협상을 통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일본은 북한이 진정코 바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우선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고 다음이 핵문제이다. 북한의 행태를 바꿔 놓는 데 있어 일본은 분명히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내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의 지지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은 미일신방위지침, TMD 참여, 경제적 힘을 활용할 대북협상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지 차원에서 모두 한반도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나라이다.¹⁷⁾ 일본정부는 KEDO의 경제성에 한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를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KEDO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국회가 KEDO에 예산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미사일 협상은 바로 한·미 양국이 구상하고 일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포괄적 접근법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이 뉴욕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협상에서 합의한 대북 농업프로젝트는 카터 센터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감자생산을 위한 종자와 비료, 영농기술 등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미사일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농업지원을 할 수 있

17) 제임스 릴리, 길정우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과의 인터뷰 (1999.2.11).

을 것이다. 종자, 비료, 농기구 등 농업관련 개발원조의 형태를 떨 수 있을 것이다.

(2) 북-미·일 수교 및 남북 교류·협력 단계: 사회간접자본 지원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셈이다.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정책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을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시키는 단계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실현하고 동시에 남북간에 교류협력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William Taylor와 Glenn Back는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승인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¹⁸⁾

첫째, 미국 공식수교가 실현될 경우 북한은 내부 정보통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북한 협상력의 주요소인 예측 불허성과 비밀성이 사라지게 된다. 또 미국정부와 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함으로써 과거첩보위성에 의존해 온 정보를 보완, 검증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통제력 유지를 위해 미국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미국의 북한의 경제개혁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미국이 선례를 만들면 한국과 일본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

18) "Time is Ripe for Engagement," *Los Angeles Times*, March 26, 1999.

함으로써 이 지역 주역들을 공식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관계 정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투명성과 신뢰구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용정책이 현재로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대안일 것이며 북한은 미국이 제의한 포용정책에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립과 내부붕괴, 또는 전쟁을 막는 최상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수교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50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 개발지원은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원 지원이라는 보다 진전된 형태가 바람직하다.

(3) 인권 단계 - 한반도판 헬싱키합의 단계: 광공업지원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이 헬싱키 합의와 냉전구조 해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인권문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헬싱키 선언의 제1부에 10개 원칙 중 일곱번째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인권존중에 관한 원칙은 이를 통한 자유화의 바람이 언젠가는 사회주의 사회에 부지불식간에 파고들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다. 소련은 이를 '트로이의 목마', '판도라의 상자'라고 까지 비난하면서 한사코 양보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서방측의 전체적인 서명 불응태도 고수에 지고 말았다.¹⁹⁾

최근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런 점에서 적절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

19) 이장희, "Helsinki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 (1989), p. 43.

장관은 3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이 연설에서 북한당국이 탈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탈북자 문제를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먹을 권리는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자유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과 세계인권선언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 “모든 이들은 각국의 국경안에서 이전과 거주지의 자유를 지닌다”는 조항과 “모든 이들은 자신의 조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떠날 자유가 있다”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종합하면 먹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는 탈북자를 사실상 생존을 위해 뛰쳐 나온 ‘경제적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북한의 인권문제를 협상하고 그 대가로 광공업 부문에서의 개발원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6. 북한지도부 설득 방안

북한을 개혁·개방과 냉전구조 해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발상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설득 방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 체제에서 개혁·개방과 냉전구조의 해체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20) 「한겨레신문」, 1999. 3. 26.

대전환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태도를 바꾸어 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과 미국 등 주요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북한은 개혁·개방해도 붕괴하고 안해도 붕괴한다는 주장이 팽배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게 겁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개혁·개방에 대한 공포심부터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지도부는 체제위기 상황에서 대내외 정세에 대하여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교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가. 북한지도부의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 교정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이 처해 있는 정세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 많다.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 체제의 유지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중앙명령경제체제의 마비, 식량배급 중단, 대량의 아사자 속출, 탈북자 증가, 주민들의 심리적 체제이반, 가치의식의 변화,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감, 김정일에 대한 불신과 불만 증대 등 중대한 체제불안적 요소들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변화는 1990년 이후 급속 진행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이를 무력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상당부분 소진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체제의 구조조정, 정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혁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폐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 체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러한 북한의 정세에 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개혁·개방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체제의 변화가 더 급속히 파괴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개혁·개방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되면 오히려 체제유지에 기능적인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당장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생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심화되면 불만이 물밑에서 축적되고 격렬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력적으로 분출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오히려 개혁·개방하면 경제를 희생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중국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지도부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지도부는 개혁·개방에 대한 두려움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다. 개혁·개방하면 필연적으로 체제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다가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체제 위기적 상황속에서 개혁을 잘못 하였다가는 체제의 존립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만 변화를 시작해도 급속한 체제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토크빌의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했다.²¹⁾ 위에서

21) Minxin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4), p. 45.

부터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면 밑에서 억제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적 상황에서 개혁을 시도했다가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 지도부가 감당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나치게 토크빌의 역설에 구속되어 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개혁의 시도에 의하여 혁명이 촉발된 사례가 많기는 하다. 토크빌에 의하면 혁명이 발발하는 것은 반드시 상황이 악화되어질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행실을 고치고자 시도할 때라는 것이다. 전제정권을 개혁하고자 할 경우의 기본적인 위험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대중들이 갑자기 구정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는 것과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생활수준의 개선, 악압의 감소, 자유의 신장 등이 실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며 급진적인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토크빌의 역설은 통치자가 감수해야 할 모험이다. 개혁은 국가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다.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자기유지의 수단이 없는 국가이다. 개혁은 제도 개선이나 체제의 결합을 보완함으로써 혁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Samuel Huntington도 토크빌의 역설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혁은 통치자가 동맹세력으로 선택한 사회집단이 누구이냐와 개혁이 어느 집단에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혁명에 대한 촉매제가 되거나 또는 혁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개혁이 도시의 인텔리겐차와 그 동맹세력을 이롭게 할 때는 반드시 혁명의 촉매제로 발전하며, 반면에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을 동맹세력으로 형성할 때는 혁명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Albert Hirshman도 동맹형성이 혁명을 피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²²⁾ 결국 북한은 개혁을 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개혁이 체제를 보존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나. 동독의 서독 흡수통일에 대한 인식 교정

북한지도부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동독의 교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고 있다. 왜 흡수통일되지 않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이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간파하고 대중의 불만을 헤아려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했더라면 서독에 흡수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동독의 지배엘리트는 너무 안일하였던 것이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위기의 징후들을 개혁의 경종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책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었고 수구적이었던 것이다. 동독이 중국이나 소련식의 근본적 발상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은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출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붕괴 직전까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지배엘리트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중들의 탈주와 붕괴 사태에 직면하여 한 순간에 무력하게 몰락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동독이 중국이나 소련처럼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면 흡수통일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혁·개방이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체제를 유지하는

22) *Ibid.*, p. 46.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지배엘리트들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체제를 포기하는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통일은 무엇보다도 지배엘리트들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은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개방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반대입장으로 일관했다. 구동독 체제하에서 개혁적·저항적 엘리트층은 발달하지 못했다. 심지어 동독의 붕괴과정에서 지배엘리트들은 개혁적인 국제환경과 분출하는 대중적인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독색채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개혁요구에 대해 미온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다가 개혁적인 시민단체들의 저항 분출, 대중들의 해외탈주와 시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배엘리트들은 이 와중에서도 개혁을 수용하지 않는 둔감한 모습과 보수성을 드러냈으며, 급기야는 정치적 공황에 빠져 몰락하였다.

돌이켜 보면,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에게는 두 차례의 개혁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실기하였다. 한 번은 1980년대 중반부터 조성된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개방 분위기였으며, 다른 하나는 1989년 가을 대중들의 반란이 연달아 일어나던 시기였다. 그들은 소련의 길도 가지 않았고, 중국의 길을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대중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이라는 길을 겪게 되었고, 서독의 지배엘리트들의 주도하에 철저히 숙청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²³⁾

북한은 지금까지 정확히 동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제위기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당의 사상적 순결성만 지키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당의 사상적 순결성 상실이 아니라 대중의 허기진 배이다. 이데올로기는 공허한 것이며

23) 유팔무,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의 변화” (미발간 논문, 1998).

이차적인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욕구가 만족되어질 때에 제대로 작동하는 철학적 의미체계일 뿐이다. 체제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북한은 근본적 구조조정없이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등의 구호하에 이데올로기적 수사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적 징후들을 체제변화의 필연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소련, 동독, 북한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상황은 붕괴 이전의 동독에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례가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에게는 최선의 모델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 모델을 따르더라도 단기적인 혼란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도 이제 개혁·개방이 북한의 엘리트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소련 체제변화 및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교정

북한지도부는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소련의 경우는 체제붕괴가 아니라 체제변화이다. 소련방의 해체는 소련의 시각에서는 해체이지만 각 독립국의 입장에서는 해방이자 독립이다. 러시아의 경우 물론 체제붕괴가 아니라 체제개혁이었다. 민주화·시장화를 골격으로 하는 체제개혁이었다.

둘째, 소련과 중국의 경우 체제변화를 하고서도 권력엘리트들은 잃은 것이 없다.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제민영화에 편승하여

권력기반을 더 확대하였다. 권력엘리트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들은 기업소유주로 변신하거나 새로운 체제에서도 지배엘리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²⁴⁾

셋째,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은 크게 성공했고, 러시아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북한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델마저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의 차이는 기득권이 많은 권력엘리트들의 저항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권계급의 기득권이 뿌리깊은 러시아에서는 저항을 돌파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개혁이 불가피했던 데 반하여, 기득권의 저항이 없는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²⁵⁾

러시아의 시각에서 공산당과 기존의 국가기관은 경제개혁에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먼저 행해져야 했던 것이다. 정치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개혁도 성공한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개혁은 급진적이었다. 짧은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경제개혁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경제개혁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가지 개혁정책이 공산당 조직과 기존의 국가기관을 통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²⁶⁾

개혁이 시작된지 매우 긴 시간이 지났어도 중국은 국영기업에 크

24) 조한범,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개혁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25)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1 (1996), p. 54.

26) Jingjie Li,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Russian Economic Reform,"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1996), p. 310.

게 손을 대기는 커녕 그 존재를 보호하고 발전을 장려했다. 대신에 새로운 집체기업, 즉, 향진기업, 사기업, 개인기업, 공동기업, 외국과의 합작기업, 외국기업 등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하는 데 큰 힘을 쏟았던 것이다.²⁷⁾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잡으면서 기존의 경제체제에 새로운 경제체제를 보완적으로 접목시키는 형태였다. 이러한 모든 차이가 지배엘리트의 특성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개혁·개방에 대한 저항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식의 모델을 선택하여 개혁·개방을 선택한다면 중국 못지 않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라. 냉전구조 해체가 남·북한에 주는 의미

냉전구조 해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민족이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이행했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 탈냉전의 파고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한반도에 탈냉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탈냉전의 거센 파고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왔을 뿐이다. 남한은 IMF 한파, 북한은 처참한 식량난으로 남·북한이 공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닌 탈냉전의 영향인 것이다.

냉전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능했지만 소련 붕괴 직후부터 더 이상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변화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과

27) *Ibid.*, pp. 311~312.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 직후 이 정책은 다소 변화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상품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소련의 붕괴 직후 한국에 불어닥친 우루과이라운드드가 잘 증명해 준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출범(1995.1.1) 이후 한국에서 가능하면 많은 식량과 공산품, 지적재산, 금융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WTO출범 이후 불과 3년만에 한국은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게 되었다. IMF사태는 우리의 내부적인 원인에 도 기인하지만,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질서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냉전시기 소련, 중국, 동구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 지원, 협력을 받아왔다. 냉전의 종식으로 사회주의 우방국이 소멸된 후 북한은 식량난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탈냉전의 영향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난은 문제의 원인이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공히 냉전종식후 급격한 상황변화속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북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통미 봉남 정책으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질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만이 20세기의 유물인 분단과 이념대결로 고착해 있을 수 없다. 20세기의 유물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남북한이 통일하지 않고는 21세기 동북아 경쟁구조속에서 번영하기가 어렵다. 결국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은 우리 민족이 더욱 번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남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같이 잘 살자는 것이며, 분단된 상태로는 잘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 남한의 대북정책 설명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불안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여전히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뿌리깊은 의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포용정책이란 이전의 조악한 방법에서 이제 훨씬 교묘하고 영리한 방법으로 흡수통일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통령은 김영삼 전대통령과는 달리 북한의 붕괴를 주장하거나 예측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솔직하게 설명해 왔다. 북한지도부에게 개혁은 현재의 북한지도층을 남한의존적인 경제적 관계속에서 탄생하게 될 남한에 종속적인 새로운 지도자들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 북한지도부에게 개혁은 북한체제의 붕괴만큼이나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²⁸⁾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과 냉전구조 해체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흡수통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지도부에게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접촉면 확대가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이득요인이 훨씬 크다는 점을 차분히 인식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및 개발 허용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고 심각한 외화난 극복에 도움이 되며, 농업, 어업분야 등의 협력을 통해서 식량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²⁹⁾

28) 셀리그 해리슨, “햇볕정책의 대북역효과,” 『한겨레신문』, 1999. 3. 8.

29) 통일연구원 정책보고서 99-06.

7. 북한의 예상태도

북한의 실상이 양면적인 것은 사실이다. 군부가 득세하고 있으며,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폐쇄주의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북한의 일관된 태도는 첫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체제의 생존을 지킨다, 둘째, 체제생존은 이제까지 체제가 형성해 온 방식을 고수할 때 가능하다, 셋째, 체제생존을 위하여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까지 갖춰야 한다, 넷째,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사회주의권 대붕괴 이후 10년 동안의 폐쇄주의 실험과 개혁개방의 지연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상황의 악화이다. 1990년대 중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굶주린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가정을 포기하여 ‘꽃재비’라고 불리는 어린 부랑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장마당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다. 다수의 부랑아들은 조직화되어 식량이나 돈을 훔치거나 약탈하기도 한다. 많은 주민들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 있다. 그들은 김정일을 ‘땅꼬맹이’라고 비웃으며 국민들 앞에서 연설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비하한다.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문화상’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 국민들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수군거린다고 한다.³⁰⁾ 과거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입장을 따랐던 데 비해 이제는 정권

30) 귀순자(전 대학교원, 사회안전성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 지도원, 1998년 5월 귀순) 증언.

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북한은 남한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자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악몽을 주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볼 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접근법에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관련 회담에서의 북한의 태도가 의미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이 긴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 도입을 목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작년 9월 헌법개정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범위를 확대(20조), 개인소유의 주체가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약자, 가정주부, 연금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개인소유가 가능(24조), 협동농장원들이 아닌 주민, 근로자, 사무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경작되었거나 묵인되어온 터밭의 합법화—개인소유의 대상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추가(24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원가, 가격, 수입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자본주의적 경영기법의 도입을 시사(33조),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대외무역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하도록 변경(36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삽입(37조)하여 합영·합작 외에도 100% 외자기업 유치 허용을 시사한 것 등이다.³¹⁾

31) 최수영·오승렬·박형중·임강택,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8-10, 1998).

또 하나의 변화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의사를 밝히는 한편 1997년 9월 IMF 실상조사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1998년 2월 World Bank 방문단을 받아들이는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이는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향한 북한의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들어 북한이 UNDP의 지원을 받아 자국 관리들을 외국으로 보내 시장경제를 배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UNDP 주최로 열린 농업복구와 환경보호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생산능력을 재건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농업복구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와의 정책대화를 개시한 바 있다. 1998년 중반 현재 해외에서 시장경제를 배우고 있는 북한관리의 숫자는 30명을 넘어서고 있다.³²⁾

북한의 무역성의 김룡문 부상은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백방으로 살려 자본주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사업에서 활로를 열어나갈 결심”이라면서 앞으로 인재양성 등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대책의 하나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외의 기타 특수경제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북한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나진·선봉 외의 특수경제지대 창설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금 법적 정비와 하부구조 설비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³³⁾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명예회장을 평양에서 극진히 영접함

32) 브래들리 밥슨, “변화직전에 놓인 북한”, p. 6.

33) 「연합뉴스」, 1999. 3. 22.

으로써 포용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건만 좋다면 남한과 더 많은 경제적 협력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수백만의 아사자를 양산하는 등 체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개선된 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안부재의 상황이다. 10년간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에게 개혁·개방은 이제 지속적인 침체와 붕괴의 위협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다른 사회주의의 경우를 보았듯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고립-재편입이 필연적 궤적이라는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미동과 더불어 외부환경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부에서 강력한 유인동기로 찾아온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게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새로운 정책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이 필연적 과제라면 북한이 현재의 조건을 무시하고 더 나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8. 맺음말

가. 차선의 대안

포괄적 접근법의 핵심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

에 개발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분위기에 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법을 통하여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과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고 봉쇄와 압박을 가하면 전쟁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것이나 갈 데 없이 코너로 몰린다면 승패에 상관없이 협상용으로 이관사관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래를 자신있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로 버틸(muddling through) 수 있으나 또 붕괴할 수도 있다.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는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키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며 비생산적이다. 북한이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절망적 몸부림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은 당장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변화하여 체제의 특징을 바꾸든지, 내분이 발생하여 폭발하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붕괴대신에 외부의 영향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체제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장기과제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통일정책의 과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대남적대감을 해소하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나. 정책효과: 북한의 안정적 변화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만들어 북한에 제시하되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를 ‘독이 든 당근’(poisoned carrot)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장 배고프기 때문에 받아서 독을 씻어내고 먹을 것이다.

서독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하여 동독을 유인했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지원 제공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경제적 열세에 놓여 있던 동독 정부는 인적 교류의 대가로 받는 서독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러한 이유에서 서독과의 교류에서 파생될 정권의 위협을 인지하면서도 교류를 지속하였다. 단기적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추구한 서독의 경제적 지원은 결국 동독정권의 변화유도를 위한 효율적인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³⁴⁾ 체제유지에 급급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서독보다도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 한반도판 데탕트 도래의 조건

현안이 되어 있는 미사일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에 데탕트가 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하여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을 때 동서간의 헬싱키합의가 가져온 데탕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75년 이후 CSCE 재협상회의가 타결된 것은 1989년 Wien회의였고 George Schultz 미국무장관은 이 Wien회의 폐막에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베를린장벽을 유럽분단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그것의 철거를 요망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34)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9.

도 포괄적 협상의 3단계인 인권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냉전구도에서 인식의 전환을 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개혁·개방하기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이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토 론 〉

사회자: 논문발표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고문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통일의 선례인 독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독일은 동서독간의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냉전구조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불안감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포괄적 접근을 통하여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면 경제개발과 지원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전적으로 남한의 논리일 뿐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하여 북한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국가가 현재의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수십차례의 반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강국화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전해체방안을 구상하고 있기에,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한 ‘안전장치’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를 남북한에만 국한하지 말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다자간 협의라는 입장에

서 포괄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루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1975년 유럽에서 이루어진 CSCE체제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중, 일·중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평화센터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개혁·개방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중국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개혁·개방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북한 고유의 논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체제에 이상이 발생하면 남한이 이를 이용하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개혁·개방을 회피하는 속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가에서 다국적 토론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냉전의식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노력들은 단순히 이상(理想)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전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남북한주민에 대한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한 지도층 및 남북한 주민 의식을 개혁하여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국민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북공존이라는 의식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숙: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주로 경제원조·개방원조라는 경제논리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구체화·적합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북한지도부의 인식 교정을 통한 개혁·개방 유도입니다. 즉, 구소련체제의 변화, 동독체제의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 등의 사례를 북한지도부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 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북한지도부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만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정일의 의식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설득방안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포괄적 접근방법입니다. 군사적 위협을 경제원조로 상쇄 시키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와는 달리 체제 경직 및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북한이 과연 경제회복, 여건회복을 이루면 평화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 동안 거짓된 의식주입을 통해 교육해 온 것들이 개혁·개방에 따른 각종 정보 유입 등으로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발생하는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陸忠偉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내심 반대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무관심 또는 두둔하는 식의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이 남한의 선의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무력도발을 일으켰을 경우에 중국은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는 중국지도부는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마모토 타다미찌: 먼저 일본정부의 관료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북한은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페리보고서가 곧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올 여름이 오기 전까지 주변국들은 대북한정책 수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북한 스스로가 체제안정을 느끼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 개방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둔 적도 없었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북한의 이해를 추구하고 우리의 호의를 알리면서 호의적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도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끔 침묵하면서 북한에게 우호적 신호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일은 북한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태도는 모두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간 6자회담의 추진은 어렵지만 비공식적 차원에서 대화 진행 노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뢰회복의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대화의 가장 적격자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 북한의 체제붕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중·북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고위급회담 등을 통하여 북한을 설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C. Kenneth Quinones: 이번 회의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론의 장을 조성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국민 모두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발제내용들은 북한의 평화적 변화가능성을 예상하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남북한이 대립의 관계에서 상호공존의 관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냉전구조 해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에게 우리의 의도대로 따라와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를 보는 태도, 이해도, 주민의식교육면에서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는 아직도 ‘미제’ 또는 ‘미제국주의’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북한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과 주변국의 정책변화를 받아들이고 남북대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하는 등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태도를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토론자 분들의 지정토론을 마치고 논문발표자 두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陸忠偉: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정유지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한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 핵의혹문제에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

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 무역시장의 교류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중·한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남북한간 군비증강문제 등에 중간적인 제어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미관계에서도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은 우선 경제적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상품경제를 수용하는 데 큰 비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동북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의 경험을 북한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전면적인 개혁은 회피하고 부분개혁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이 북한의 서방유학과 출신의 학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중국개발부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자본이 북한 개발사업에 유입되면 북한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기업들은 북한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1970년대 중·미, 일·미 관계개선과 비교할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2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해방을 이룬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1978년 ‘사상해방’ 이후 당시 중국 지도부들의 철저한 개혁의식에 기반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주식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체제적 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학자, 학생 방문단이 오면 우리는 「경제개혁위원회」와 「경제개발부」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북한일행은 국가적 생산력 증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개발부」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체제적 측면에서의 개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개발위원회」의 방문은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한에게 강요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1950년대 중·소 관계 악화는 소련이 소련식 경제개혁을 중국에게 강요한 것에서 연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개입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의 유사점은 ‘북한과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나름대로의 중국식 방식인 ‘한의치료법(韓醫治療法)’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체질이 약한 병자에게 수술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근거입니다. 즉, 교류, 협력, 신뢰, 지역공동의 번영을 위한 접근법입니다.

서재진: 박종화 교수님께서 ‘전쟁방지’가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추진 등도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대타트를 실현하고 전쟁방지, 남북한간 교류·협력, 신뢰구축 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de facto*) 측면에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위협 포기와 경제지원을 반드시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밝히고자 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 전면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현재 협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위협,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등을 포기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획득할 수 없고 한·미간의 대북정책 추진에서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전의식과 냉전사고를 남북한에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북한지도부의 인식교정과 관련한 사항에서, 김정일을 누가 움직이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학계의 시각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협상채널들이 있는데, 미사일협상이나 4자회담, 남북회담 등에서 협상대표들이 공식적·비공식적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의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재원들이 북한체제를 경직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모습들이 북한지도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경제구조를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리를 들어서 북한의 경제구조가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회복 이후 개혁·개방으로 인해 체제붕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북한지도부의 우려에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북한 경제난이 지닌 영향력이 상당히 심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체제에서나 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이에 기반하는 정치, 사회복지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북한은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양대 기둥인 명령경제체제와 당조직이 하부구조인 경제체제가 붕괴됨에 따라서 당조직 기반이 해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일이 당을 거의 배제하다시피하고, 군부를 부상시킨 이유는 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군부를 이용하여 권력기반을 확충·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가지고 온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권력 유지는 고려할 수 없는 문제이고, 북한주민들의 의식주문제 해결 없이 체제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지도부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여파 등은 사실상 부차적인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 회의를 마감하면서 사회자로서 토론에서 나타난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주로 현실을 중시하고 현상유지(status quo)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비판세력은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상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오히려 비판세력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현실 직시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책임 있는 정부가 이상을 추구한다’는 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강점과 신선향도 있지만 약점과 위험요소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낙관론적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와 건설적인 주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시면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시키셨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로써 2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일정

< 세부일정 >

- 12:30~13:00 등록
- 13:00~13:30 개회식
- 13:30~15:50 제1회의 발표 및 토론(사회: 문정인, 연세대 교수)
 - 발표: 한반도 냉전구조에 관한 제언: 해체될 것인가?
 - Richard W. Chadwick(하와이대학교 교수)
 -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중국과 미국의 역할
 - 김일평(코네티컷대학교 교수)
 - 토론: 길영환(아이오와주립대학교 교수)
 - 배정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윤영관(서울대학교 교수)
 - Alexander V. Vorontsov(러시아과학원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15:50~16:10 Coffee Break
- 16:10~18:30 제2회의 발표 및 토론(사회: 최상룡, 고려대 교수)
 - 발표: 북한의 개혁·개방 방안
 - 陸忠偉(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 서재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박종화(대통령 통일고문)
 - 이경숙(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야마모토 타다미찌(일본대사관 공사)
 - C. Kenneth Quinones(주한 아시아재단 대표)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배신 조한범	영정상 공저	호호진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	외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	외공저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5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4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발간예정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